

모심과 살림

24_호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모심과살림 24호 2024년

등록번호	강남, 사00117
발행인	신명호
편집자문위원	홍덕화, 권범철, 김정원, 박선아, 조미성, 홍수린
편집부	임채도, 조미성, 홍수린, 최민영
디자인	그린다
펴낸 날	2024년 12월 30일
펴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15 4층 www.mosim.or.kr / mosim@hansalim.or.kr / 02-6931-3609

책값은 8천 원입니다.

모심의 눈

- 협동조합 정체성의 거울로 들여다보기 — 신명호 04
-

기획특집 - 협동조합과 커먼즈: 사업과 결사와 전환

- 협동조합의 양 날개, 결사체와 사업체 — 김신양 14
- 한살림제주의 지역살림, 운동의 가치를 발신하는 사업체계만들기 — 김자경 30
- 협동조합과 시민의 형성 — 김정원 42
- 커먼즈와 사회전환 — 권범철 56
-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 커먼즈 — 김지음 72
- 한살림과 커먼즈: 우리를 넘어서 모두를 살리기 — 구도완 86
-

시선

-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한계 — 오수산나 104
- 기후생태 전환을 이끄는 여성농민의 실천 — 정숙정 118
-

모심지가 만난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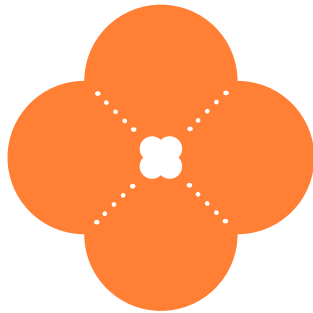
- 누구나 좋은 것을 먹고 나눌 권리 — 벚밭 134
-

독자의 말

- 불편한 마음을 성찰하기 — 한살림제주 독자모임 150
-

모심의 눈

협동조합 정체성의 거울로 들여다보기



협동조합의 정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최우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믿음,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의 규범 ...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이념과 원칙들은 어찌나 매력적인지, 협동조합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일단 조합을 서둘러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잘 굴러갈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몬드라곤 노동자협동조합의 창시자 호세 마리아 신부는 협동조합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윤리’와 ‘역량’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윤리’라는 기둥이 우리를 깊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눈부신 윤리의 규범이 현실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무임승차’ 하려는, 일부 조합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협동조합의 실패’를 불러오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때 실패의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우리 인간은 협동조합주의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온통 이기심뿐이라는 주장이 복잡다단한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인간은 자나 깨나 협동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주장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이타적입니다.

이따금 ‘협동조합의 실패’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협동조합의 애달픈 숙명 때문입니다. 200여 년 전에 협동조합이 처음 싹 틔운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버트 오언(R. Owen)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편리한 소비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 선구자들의 초기 목표는 전체 사회를 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으로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등한 사회의 큰 그림을 그리는 협동공동체 운동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자, 그런 무모한 시도 대신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내부에 장착한 작은 조직들을 착실히 건설해 나가자’는 쪽으로 노선이 선회합니다. 이른바 ‘점진주의적 실용론’이지요. 이제 협동조합 운동은 더 이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시장경제 안에서의 경영 시스템에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큰 사회 안에서 탈자본주의적 원리가 구현된 작은 사회, 즉 협동조합을 경영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

다 보니 시장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역량’이란 기동은 이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버티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운동은 자신을 둘러싼 큰 사회의 변화에는 완전히 무감(無感)하게 된 걸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협동조합을 기업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협동조합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전체 사회의 변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미시적인 활동이 어떻게, 큰 사회구조의 변화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살림생협을 예로 들면, 1989년의 『한살림선언』은 산업문명의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협은 그리로 나아가는 경로 내지 도구임을 사람들은 믿었고 또한 함께 확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종 맞이하는 위기의식은 바로 나의 생협 활동과 큰 사회의 변화가 전혀 관계없어 보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한살림생협에서의 소비 행위가 쿠팡에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질 때, 한살림 조합원인 나와 세상의 변화를 연결하는 고리

는 끊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은 협동조합 얘기를 할 때면 언제나 따라붙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는 흔히 결사체와 사업체라는 협동조합의 이중적 속성의 문제로 표현됩니다. 이 글 첫머리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결사체가 ‘윤리’ 영역의 문제라면 사업체는 ‘역량’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에 나온 레이들로 보고서는 ‘이념적 위기’라는 키워드 아래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①협동조합의 참된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②협동조합은 차별적인 사업체로서 명백히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③협동조합은 다른 종류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의미에서 성공한 것 이상 이룬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④만약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는 때때로 당혹스러운 방향으로 변화할 때 협동조합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⑤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다른 종류의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새로 창조해가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대신, 이 질문들이 시사하고 있

는 자명한 명제 세 가지를 간추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체로서의 상업적 성과는 협동조합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역량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경제적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협동조합의 진짜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되 “이상한” 방향으로 뛴아가게 만드는 압력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을 둘러싼 더 큰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협동조합들이 부딪치고 있는 온갖 문제와 고민들, 예컨대 “충분한 수익을 못 내서 생존이 어렵다”, “경영이 부실해져 실무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조합원들이 참여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일반기업과 다를 바 없는 우리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의 활동이 전체 사회의 변화와 무관해 보인다”, “좋은 가치와 원칙은 그저 말일 뿐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없고 직원을 대하는 조직문화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민주적이라는 미명하에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횡행한다” 등등은 모두 위의 명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고민들의 연원을 따져보면 인간이, 혹은 협동조합이 가진 태생적 조건—다분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협동조합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알려져 있는 무임승차자 문제는 이기심과 이타심 혹은 협동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문제에서 연유합니다. 또 앞에서 협동조합의 ‘애달픈 숙명’이라 표현했던 문제, 즉 자본주의를 넘어서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상수(常數)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 안에서 개개의 협동조합은 사업체로서의 성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바깥의 자본주의 사회가 변화하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 호세 마리아 신부는 소리 높여 말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공약에서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한다는 목표가 한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그러니 우리가 눈앞의 조직 경영에 바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금세 깊은 갈등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사회를 꿈꾸지 않는 우리의 활동은 정당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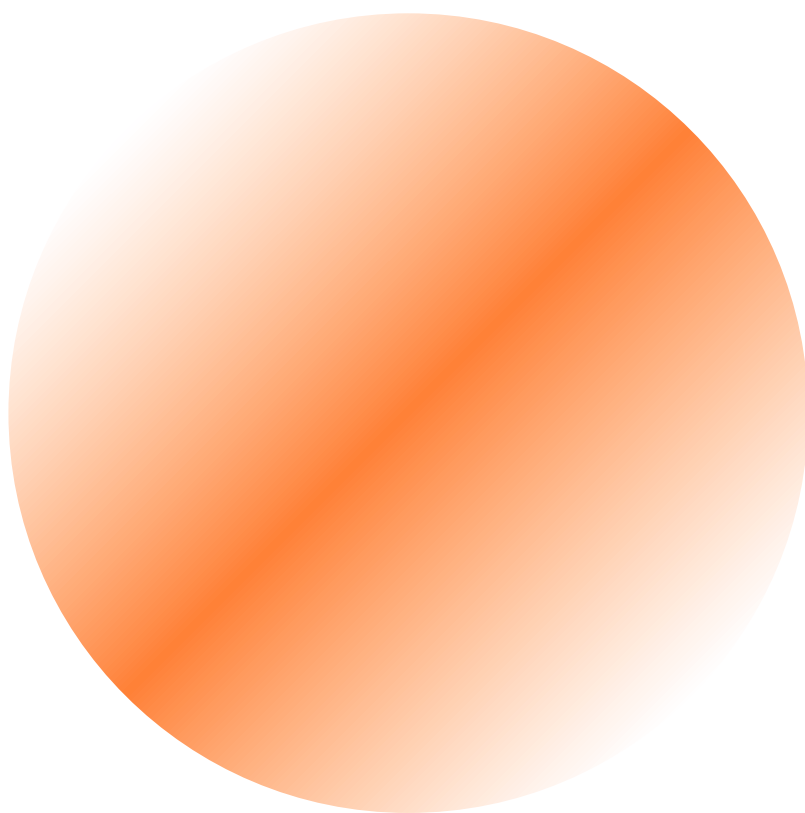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의 정체

성에 관한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 고민들을 풀어줄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숙명과도 같은 정체성의 고민을 손에서 놓지 않고 부단한 성찰과 발명을 계속하는 것이 건강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일 겁니다. 호세 마리아 신부가 그토록 자신 있게 자기들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자신들의 노동자협동조합 안에 담으려 애쓰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루아침에 이를 수 없는 고단한 과정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과정을 멈추지 않을 때 자신들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의 딜레마를 떨쳐버리려 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기하면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우리 협동조합의 건강을 살피는 거울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12월

신명호 모심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기
획
특
집

협동조합과 커먼즈: 사업과 결사와 전환



협동조합의 양 날개, 결사체와 사업체

한살림제주의 지역살림, 운동의 가치를 발신하는 사업체계만들기

협동조합과 시민의 형성

커먼즈와 사회전환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 커먼즈

한살림과 커먼즈: 우리를 넘어서 모두를 살리기

협동조합의 양 날개, 결사체와 사업체*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300년 협동조합의 역사와 200년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학습을 조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개정증보판,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 《처음 만나는 협동조합의 역사》 등이 있다.

✉ shinyangkim@hotmail.com

* 이 글은 최근 발간한 필자의 저서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 개정증보판(착한책가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린다.

핵심어: 협동조합의 정체성, 결사체, 사업체, 민주주의, 서비스

들어가는 말

“당신은 연구자입니까, 활동가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연구 과제를 함께 했던 교수나 연구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활동가들조차 궁금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협동조합 덕후’라고 떠돌고 다니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 또는 학위나 자격증을 정체성으로 삼는다. 교수, 박사, 이사장, 사장, 의사, 연구자 등. 그러다 보니 교수나 선생은 어딜 가든 가르치려 하고, 사장은 늘 시키려 하고, 박사나 연구자는 다 아는 체하며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굳이 불법(佛法)을 소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는 인연에 따라 달라지기에 ‘무아(無我)’라고 한다는 그 신기한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가면 나는 조합원이나 대의원 노릇을 하고, 소속된 연구회에서는 회장 노릇을 한다. 사실 예전에는 내가 속해 있는 협동조합에 가면 내심 협동조합 전문가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일개 조합원일 뿐인 내가 이사장이나 상무 등 간부를 만나면 어떻게든 지적질을 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합원 노릇이나 잘하자고 다짐하며 우리 조합에서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을 보내고, 대의원 모임이 있다면 빠지지 말자는 원칙도 세웠다.

그런데 나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여전히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분명한데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결사체(association)이자 사업체(기업 enterprise)’라는 표현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을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해석하고, ‘결사체는 운동하고 사업체는 돈을 번다’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쨌든 협동조합을 결사체이자 사업체라는 이중구조로 보고,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곤 한다. 이 논리가 비약하여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조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실상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다거나 그 와중에 가랑이만 찢어진다는 한숨 섞인 탄식이 들린다.

이론과 실천의 만남이 꼭 이론가와 실천가의 만남이라 할 수 없고 내 안에 다 있듯이, 사업체와 결사체는 따로 떨어진 두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협동조합에 있다. 그러니 사업체와 결사체 사이에서 그 네 타며 정신분열을 일으킬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을 알면 혼란의 근원이라 생각하던 것이 너무나 필요했던 발명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인가?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ICA의 협동조합의 정의를 보자.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기업)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속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그 사람들이 결사체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그 목적을 무엇으로 충족시킬까?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의 본질(주체), 목적, 방편(수단)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본질은 결사체이고 사업체는 그 결사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사체와 사업체의 관계는 본질과 방편 또는 주체와 수단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협동조합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여 결사체이자 사업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여기는 데 있다. 그러니까 결사체와 사업체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 해석의 오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결사체와 사업체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즉, 결사체는 운동을 하고 사업체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누구는 사업을 더 강조하여 사람들의 관계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별로 문제 삼지 않기도 한다. 또한 결사체이자 사업체라는 것을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사회적 목적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 결과 경제적 목적이 우선되고 사회적 목적은 뒤로 밀려나는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협동조합을 결사체와 사업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두 가지를 두고 중요성에 따라 선후를 따지며 대립이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면 정의에 나오는 결사체와 사업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협동조합의 정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결사체와 사업체의 기원

협동조합의 정의는 1920년에서 1932년까지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초대 협동조합 국장을 지낸 조르쥬 포계의 작업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¹⁾. 포계는 의사이자 근로감독관으로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면서 열렬한 협동조합운동가가 되었고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1935년에 『협동조합 섹터』²⁾라는 책을 발간하여 처음으로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과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성격을 규명했다.

포계에 따르면 경제는 하나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 민간 자본주의 부문, 민간 부문이지만 가정경제 및 농업이나 장인들의 경제 부문, 도덕과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협동조합 부문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복합경제의 한 부분으로 협동조합 경제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포계는 왜 굳이 협동조합 부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 속에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1) 김신양. 2021. 『처음 만나는 협동조합의 역사』, 착한책가게. 258.

2) Fauquet, George. 1935. Le secteur coopératif. Les Propagateurs de la Coopération.
이 책의 부제는 ‘협동조합 제도에서 사람의 자리, 경제에서 협동조합의 자리’다.

협동조합운동은 1895년에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 operative Alliance, ICA)이 창설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당시 ICA의 리더들은 ‘협동조합공화국’이라는 이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동조합공화국은 정치경제학자인 샤를르 지드가 만든 개념이다. 그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임금노동을 전환하고 경제를 민주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 즉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자본에 예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은 협동조합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협동조합운동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샤를르 지드를 중심으로 한 ICA리더들의 다음 세대인 포끼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보면서 협동조합공화국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경제가 과거의 다른 모든 경제 형태를 삼켜버릴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비자본주의적인 경제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복합경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며, 나라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포끼는 복합경제 안에서 민간 자본주의부문이나 공공부문과 구분되는 협동조합부문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은 17세기에 시작되어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발전한 민중결사체운동에 뿌리를 둔다. 그것이 영국에서는 로치데일의 공정개혁사회나 우애조합처럼 회(society)의 형태로 존재했고, 프랑스의 경우는 노동결사체라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어떤 곳에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던

민중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전통을 가졌다. 그런데 다른 민중결사체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조직된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것을 포개는 사업체(기업, enterprise)라고 표현한 것이다.

협동조합 결사체, 협동조합 사업체

이제 혼란과 갈등의 실마리를 풀 때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이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협동조합이 결사체와 사업체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결사체 노릇도 하고 기업 노릇도 하는 이중구조가 아니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결사체(cooperative association)와 협동조합 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의 요소를 동시에 가진다는 뜻이다.

포개가 이렇게 구분한 까닭은 비록 협동조합이 경제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샤를르 지드가 가르친 협동조합운동의 토대인 도덕적인 가치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도덕적인 가치가 협동조합 활동과 협동조합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협동조합이 번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의 도덕적인 가치를 지켜야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협동조합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협동조합 결사체와 협동조합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그래서 자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한 표를 가진다. 이 규칙은 민중결사체의 정신을 계승하기에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이건 근본적인 규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포개는 “모든 협동조합 결사체는 곧 민

주주의”³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협동조합 기업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는 “협동조합 기업은 공급이든 유통이든 일자리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다.”라고 했다. 따라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며, 각 조합원이 협동조합과 거래한 양에 비례하여 잉여를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포계의 설명에 따라 협동조합을 규명해보면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서비스가 된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기에 결사체이며,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업 활동인 것이다. 운동과 사업, 사회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서비스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이 결사하고, 그 결사체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업 활동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기업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체는 자본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상호적인 이익(mutual interest)’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간주한다. 협동조합의 비영리란 자본 기여에 따라 혜택을 주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따라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잉여가 발생할 경우 배당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3) Fauquet, George. 1942. “Rapport du docteur Fauquet sur Le Secteur coopératif.” RECMA. 85.

최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의 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협동조합 또한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오로지 공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한 상호성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성도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하기 전까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조직이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 즉 서비스 제공이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속성이다.

결사체는 민주주의, 사업체는 서비스

협동조합 결사체의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사업체의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ICA는 1995년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함으로써 협동조합 결사체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조합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시한다.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책무를 가진다. 또한 협동조합 사업체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조합원은 자본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특히 사업체로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본에 대한 통제 방식을 엄격히 정했다. 자본주의 경제의 영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가입을 조건으로 출자한 자본에 대하

여 배당을 하지 않는다. 대신 자본 기여에 대하여 보상할 경우,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잉여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할당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적립금 조성이고, 조합원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편익제공이다.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무를 가진다. 1차(단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다른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들은 그들 협동조합의 자본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최소한 그 자본의 일부는 통상 협동조합의 공동 재산이 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출자한 자본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통상 제한적인 보상만 받는다.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잉여를 할당한다.

- ① 협동조합의 발전 : 적립금 조성으로 가능하며, 이 중 최소한 일부는 나눌 수 없는(불분할) 적립금
- ② 협동조합과의 거래에 비례하여 조합원들에게 편익 제공
- ③ 조합원들이 승인한 기타 활동의 지원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양 날개

이제 협동조합이 결사체이자 사업체라는 것을 운동과 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지는 문제를 짚어보자.

첫째, 이러한 인식은 협동조합 결사체와 사업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앞서 정의에서 설명했듯이 협동조합의 본질은 결사체이고 사업체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구분된다. 즉, 협동조합의 사업은 결사체에 기반하고 결사체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사업 이전에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들의 관계 방식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결사한 조합원에 의해 유지되고 확대되고 강화된다.

협동조합 결사체의 민주주의는 사업체의 서비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가 참여하여 만들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민주주의가 사업에 희생된다.

둘째, 협동조합 결사체와 협동조합 사업체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서 마치 협동조합이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 조직인 양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두 마리 토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협동조합이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한다는 논리로 비약된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을 일반 영리기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수익의 일부를 떼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단지 협동조합을 잘 모른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협동조합

의 사업이 우선해야 협동조합 결사체가 유지된다는 사업체 우선론이다. 그 결과 장사에 치중하면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조합원이 주인노릇을 하든 안 하든 별로 개의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조합원을 물건을 사 주는 고객으로만 여겨서, 소비를 많이 해주는 것이 곧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체 우선론은 조합원의 이탈을 초래한다. 주인이 아닌 손님은 꼭 우리 협동조합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든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협동조합은 탈협동화의 경로에 들어선다.

두 번째 위험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부재로 인한 운영의 파행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가 희생되면 조합원은 무관심하고 소수 임원이나 직원이 운영하게 된다. 일부 협동조합에서 임원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임의로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협동조합 결사체의 민주주의가 죽으면 협동조합 사업체는 영리기업으로 변질되거나 부정과 비리로 파산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결사체와 사업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이처럼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결사체이므로 그 결사체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서로 소원해지면 해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관계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잘 되는 시기에도 조합원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 간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며 함께 극복하고자 결사하는 정도가 강하

면 사업적인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또한 협동조합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제 결사체와 사업체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관점을 재정립해보자.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활동을 한다. 그 기업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이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노릇을 하는 결사체로 조직된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에 기반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는 양 날개를 가진 조직이다.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는 새의 이름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결사체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기업으로만 인식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협동조합 또한 기업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그 결사체에 기반을 두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제활동이 사회적경제의 사업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기업으로만 인식하면 협동조합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포계는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직이기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자 했다.

이러한 포계의 구분은 비단 협동조합 운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협동조합 연구에도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기업이론으로만 협동조합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론으로만 분석하면 자

본 수익성이나 효율성의 잣대로만 협동조합을 판단하기에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 연구에서 협동조합이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사체이자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특성과 관련하여 혼란이 빚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기저에는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경제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인식의 오류가 깔려 있다. 그래서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을 일반 영리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며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여긴다. 조합원은 사업체에 관여하지 않고 소비하는 고객 노릇만 해주면 되고, 사업체의 운영은 장사한 돈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에게 맡기면 된다는 식이다.

많은 이들이 결사체와 사업체를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야 한다. 왜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게 되었을까? 조합원이 참여하다가 안 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조합원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자만 하면 다 조합원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참여하여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조합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기에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의 잘못은 없다. 왜냐하면 가입은 자발적이지

만 가입 후에는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우리는 협동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조합원이 주인노릇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까?’이다. 협동조합 프로젝트는 장사할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결사체를 만드는 일이다. 이 기획이 없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고 결사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본질이 죽은 조직에서 사업이 잘 될 리 만무하다.

문제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이다. 결사체와 사업체를 양립하기 어렵다는 말은 협동조합 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판단은 협동조합 결사체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 내려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동조합 결사체를 제대로 조직하지 않고 사업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어려워진다.

물론 협동조합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관련 법이 없거나, 있어도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은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비우호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만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남겨주었다. 즉, 협동조합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그 비결이 일곱 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비결을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고 있을까? 게다가 ICA는 2015년에 아주 상세하

게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⁴⁾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알고는 있어도 읽어본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읽었다고 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결사체와 사업체라는 말 뒤에는 간단명료하지 않고 복잡다단하여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가치를 가지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우리의 모순을 알아채야 할 때다. ‘왜 결사체이자 사업체일까?’ 궁금해 하고, 그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저 ‘어렵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을 타하기에는 아직 온전히 협동조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쓴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한티재)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살림제주의 지역살림, 운동의 가치를 발신하는 사업체계 만들기

김자경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주류 경제학 중심의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다
가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커먼즈/
공동자원 그리고 마을로 연구의 주제가
계속 바뀌고 있다. 주말에는 '달빛숲감굴밭'
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 sojuno1@hanmail.net

핵심어: 정체성,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한살림 복합체

질문을 던지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형성된 세계 식량 체계는 먹거리의 안전 문제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악화되는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2024년 유난히 추웠던 봄, 냉해를 입은 꽃들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71일 이상 지속된 역대 최장 열대야의 여름, 바닷속 산호초들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논농사 지역에는 벼멸구의 습격이 잇따르며 가을이 왔다. 이번 겨울의 날씨는 어떠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는 11월 들어 달걀과 돼지고기의 반입이 금지되었다. 매해, 매시기 먹거리와 연관된 사건이나 소식이 들려오면, 한살림제주는 더욱 긴장하게 된다. 제주 반입금지 품목이 늘어날 수록 한살림제주 매장의 매대는 그만큼 비기 때문이다.

한편, 11월은 총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 해 동안 산출된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서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운다. 조합원 수와 매출액 모두 증가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연대 활동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 해에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관계 마케팅을 시도해보고, 조합원 관심사에 맞춘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매장마다 진열 방식을 새롭게 바꿔보기로 했다. 이러한 한살림 조합의 살림살이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총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한살림제주의 한해살이를 회계감사와 사업 감사를 통해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한살림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제대로 설명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살림 운동을 통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발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4년 한살림제주가 이사회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결의했던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한살림제주가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했다. 물론,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지만, 한살림제주는 사업 면에서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살림제주는 사업과 활동 모든 면에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살림제주의 도전을 돌아보며,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발신하기 위한 사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의 실행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사업과 활동을 추진할 때마다 많은 갈등이 있었다. 각종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구성원들은 “이 새로운 도전이 한살림다운가?”라는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흔들리는 우리를, 우리의 사업 기조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한살림제주의 사례를 통해 한살림 운동이 사업체이자 결사체로써 협동조합을 선택한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문제 해결의 도구를 시험하다

2008년에 설립된 한살림제주는 201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먹거리 사업이 확장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 2024년 현재 매장 4곳(제주시 3곳, 서귀포시 1곳)과 담을 센터(물류와 로컬 푸드), 담을 밭(공동체 텃밭,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살림제주의 가족법인

으로 (주)스토어 365 제주, (주)밥상살림과 한살림제주모임회가 있으며, 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중이다. 지금까지 한살림제주는 조합원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살림 운동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사업의 주체로서 가족법인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한살림 운동을 시작하면서 상정한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부터 연합차원에서 지역살림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에 이어 지역살림이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한살림 운동의 후발주자인 한살림제주는 지역살림이라는 비전을 의식하면서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제주 지역의 과제를 탐색했다. 섬이라는 지리적·생태적 한계 조건 안에서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도농 복합적 성격을 갖지만, 주로 도시부에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온난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제주의 농업구조는 한국의 겨울철 농산물을 공급하는 산지로서, 관행 농업 중심의 대규모 단작화 농장이 집중되었다. 특히 우후죽순 관광단지가 조성될 뿐 아니라 도민들이 의견이 나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난개발 상황과 갈등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한편 청정 제주 이미지와 다르게 아동 비만율과 아토피 발병률이 높은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살림제주는 유기농 먹거리의 유통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사업을 토대로 한 제주 사회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주에서 한살림 운동을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둘째, 2012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한살림제주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였다. 2013년에는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물류

시설과 장비 투자가 이뤄졌고, 기획, 홍보 기능과 조합원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규모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일터환경과 보상체계에 대한 불만, 소통체계와 제도 미비 등의 문제가 하나씩 나타났다. 이에 2014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정관을 시작으로 규약, 규칙, 규정 등을 살피고, 사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조직과 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본 연수를 다녀오면서 장단기 과제를 정리했다. 그리하여 사업 영역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경영체 및 결사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분담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일터살림협의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한살림제주의 전략 수립과 조직 운영, 평가를 위해 사회적회계, 균형성과평가제도(BSC) 등을 검토했다.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한살림제주 고유의 지역위원회로 자리 잡았다.

한살림제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문제 해결의 도구를 살펴보았다. 2016년에는 사회적회계 방식을 도입하여 한살림제주의 사업(사업체)과 운동(결사체)이 지역사회에 어떤 가치를 발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살림제주의 사명, 가치, 목적, 활동을 정리하였다. 현재 한살림제주의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가치 담은 보고서』가 사회적회계 방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사회적회계를 도입하면서 한살림제주는 목적을 크게 ‘사업을 통한 가치 실현, 활동을 통한 가치 실현,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입’이라는 부문의 나누고, 각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 산출, 성과 지표 등을 관리하고 있다.

사업을 통한 가치실현 부문의 목적은 ①건강한 먹거리 공급, ②

가까운 먹거리 체계구축, ③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이다. 특히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의 경우,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먹거리 이외에도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한살림이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토론을 거듭하면서 사업을 통해 한살림 운동을 해야만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보았다. 사업체만 존재하면 일반 기업으로도 충분하고, 결사체만 존재한다면 사단, 재단, 임의단체 등 다른 법인형식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과 삶터는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공동체(사업체)와 생활공동체(결사체)가 한데 섞여 존재한다. 우리의 생활세계는 항상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살림은 사업체와 결사체가 함께 존재해야 의미 있는 협동조합일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식이기도 하다.

‘건강한 먹거리 공급’은 조합원들을 만나는 최전선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까운 먹거리 체계 구축’은 지역 물품 발굴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가족법인인 (주)밥상살림을 2019년에 설립했고, 담을 센터를 건설하였다.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다품목 소량 생산을 추구하는 지역 소농과 귀농인들의 판로가 되어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의 경우 지역사회의 의제인 돌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의 전 생애에 걸친 돌봄 수요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한살림제주모심회를 설립하여 조합의 담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먹거리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먹거리 돌봄을 확장하여 보건, 의료, 돌봄을 통합한 사업을 위해 제주담을의료복

지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한살림제주는 사회적회계라는 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2~3년에 한 번씩 설문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평가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해서 사업의 목적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한살림제주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목적 사업에 따른 주체를 가족법인으로 만들어 냈다. 이제 한살림제주는 혼자가 아니라, 한살림 복합체로서 각 사업 주체와 협업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제주 사회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갈등을 드러내다

한살림제주는 먹거리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의제를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동안 한살림제주가 논의의 장으로 가져온 온 과제는 생태관광, 송아지 생산기지, 어린이 공부방, 공동체 육아 등이 있었으며, 현재 사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까운 먹거리 사업’과 ‘돌봄 사업’이다.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주체를 법인화하고, 사회적회계 등 문제 해결 도구를 도입하면서 사업체계를 구축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위원회와 일터살림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살림제주의 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다.

우선 한살림 운동의 기반 사업인 먹거리 사업을 넘어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먹거리 돌봄 활동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의료사협을 왜 한살림

이 추진하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살림은 연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의제 운동이 있다. 옷되살림 운동과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운영 등이 그러하다. 먹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이웃을 돕고, 에너지전환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기에 사업추진에 의문을 표했던 곳은 없었을 것이다. 의료사협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합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서로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맥락에서 충분히 한살림답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먹거리 기반 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의가 한층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사업 확장에 대해 의결한다고 소통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 인내하면서 사업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한살림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생활공동체를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먹거리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는 활성화되었지만,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마을 모임을 기초조직으로 삼지만,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광역권으로서 활동해야 하는 한살림제주로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거리만큼 조합원 각자의 사정을 살피며 돌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조합원들에게 설문문을 통해 다양한 사업 의제에 관해 물었는데, 돌봄 사업에 대해 많은 동의를 얻었던 것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한살림제주는 먹거리 사업을 분석하면서 조합원들이 소비지향 조합원과 가치지향 조합원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했다. 먹거리 사업을 생활공동체 운동인 돌봄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소비지향 조합원들을 가치지향 조합원으로 이끄는 의미 또한 있을 것이다.

둘째, 먹거리 기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고, 한살림 안에서 노동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 노동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조합원 노동은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활동의 영역과 구분되어야 한다. 한살림의 역사에서 조합원 노동은 조합원으로서 조직 활동과 매장 사업을 담당하면서 한살림 운동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은 조합원 노동이 받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요구받고 있다.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은 활동가라는 이름의 노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살림제주 역시 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취업규칙을 살펴보았다. 여러 규칙과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한살림의 정체성에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노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사무국 직원과 매장 활동가를 통합하여 직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업무를 직무급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에 동반되어 임금체계를 재정비했다. 각 직무에 맞게 책임과 의무, 업무를 정비하였고, 이것이 업무 매뉴얼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직원 간의 갈등도 있었다. 인사위원회는 양쪽의 의견을 조정하고, 일터살림협의회와 논의하며 합의를 끌어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 모른다. 탄력근무제의 시도, 안식월의 보장, 연월차의 소진, 연장 근무 등 다양한 논의 과제가 지금도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합의 노동조건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남은 과제는 한살림제주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서 가족 법인 간 노동조건을 공평하게 맞추는 것이다. 한살림제주, (주)밥상살림, 한살림제주모심회, 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준비 팀까지 각자 소속된 직원들은 모두 한살림 제주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각자 전문 분야로 사업이 분화되면서, 각 법인체의 입장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새로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가까운 먹거리 취급 시 품위 기준에 대한 이견, 한살림 생산자와 지역 소농의 공존 문제, 먹거리 돌봄 사업에 대한 주체 설정 문제, 의료사협의 사업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견 조율, 조합원과 다른 법인의 회원(지역주민)에 대한 활동 기획 등이 한살림 가족법인 간에 다시 설명하고 새로 동의할 것을 구해야 하는 일이 추가된 것이다. 한살림제주 복합체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수많은 갈등을 드러내면서 전진하고 있다.

제주에서 ‘한살림 한다’는 것의 의미

한살림제주의 비전은 ‘밥상살림·농업살림·지역살림·생명살림’이다. 조합원들이 잘 알고 있는 비전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은 생명 운동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소 하나를 기반으로 ‘살림’ 운동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살림 제주의 가치는 “모심과 살림의 자세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지역 순환과 생태적 삶을 실현하는 생명 평화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2018년 7월에 한살림제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동의를 얻었다. 사회적회계를 통해 비전과 가치, 목적과 활동을 정했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발신하고 사업구조를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사회적

회계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지, 사회적회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살림제주는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했고, 가족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살림제주 복합체로 재편되었다.

한살림제주의 혁신은 사업을 통해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에 있다. 우리의 생활세계는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돌봄공동체, 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살림 운동은 먹거리 사업을 잘하는 것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 시장과 경제 중심의 생활세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는 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삶의 필요를 확인하여, 돌봄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살림제주의 세 번째 목적인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가 이에 해당한다. 조합의 담을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어려운 일이지만 조합원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조합원 수 정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소비지향 조합원들이 돌봄 사업을 통해 가치지향 조합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먹거리 사업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은퇴에 따른 한살림 생산자의 감소, 친환경 생산 기반의 약화, 생산자의 고령화와 돌봄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지 재배치 등 미처 한살림 전체 차원에서 논의하지 못한 과제가 많다. 한살림 매장은 한계 수량에 갇혀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만큼 먹거리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조합원 객단가가 낮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이 돌면 제주는 달걀마저도 매대

에 올려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먼저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살림 조합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편 매장은 조합원과 만나는 활동의 최전선이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환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장이 조합원과 지역이 만나는 거점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살림 자체가 지역에서 공유하는 공동체 자산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살림 운동은 생활세계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전환하는 운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살림 운동의 초기 기록을 보면 “반 활동은 힘들지만, 지역으로 걸어가는 의미를 느끼고 행복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한살림 운동의 보람을 지역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한살림제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살림 운동의 길은 경제영역을 확장하여 생활영역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한살림 운동은 생활공동체로서 삶을 서로 돌보는 관계를 형성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길에 함께 걸어가는 지역 한살림이 늘었으면 한다. 한살림제주의 이야기가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협동조합과 시민의 형성

김정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빈
곤과 사회적경제를 화두로 실천가와 연구자
로 활동했다. 자활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으
며, 몇몇 협동조합에 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
적경제 관련 저서를 단독 또는 공저로 낸 적
이 있으며,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시티즌십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 wed95@knu.ac.kr

핵심어: 시민, 민주주의, 사회적 배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비극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하층계급 여성의 비극을 코믹 판타지물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곳곳에서 드러낸 수작이다. 영화의 주인공 수남(이정현 분)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산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행복은 별개이다. 그는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기술의 발전은 그의 자격증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싶었지만, 불행한 일들이 겹치면서 돈은 모아지지 않는다. 그럴수록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공장에서 퇴근 후에, 청소, 요리, 신문 배달, 명함 날리기까지 온갖 일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황은 계속 나빠진다. 그러던 중 수남은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연속적인 살인을 저지른다. 쉴 새 없이 일하고, 열심히 살았건만, 행복은 오지 않았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간다. 수남의 비극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영화 내내 수남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기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수남의 주변에는 일하다 다쳐 폐인이 된 후, 자살 시도 끝에 식물인간이 된 남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수남이 만난 이들은 그를 이용하거나, 의심했으며, 또는 폭력을 가했다. 만약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가 있었다면? 만약 그를 지지해 주는 이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수남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가 보여준 수남의 삶은

존 피어슨 (John Pierson)이 말한 사회적 배제의 전형이었다.¹⁾ 그의 유년 시절에 집안은 가난했던 것으로 보이며, 성인기에 그가 찾은 직업은 불안정 노동이었다. 지지자도 없었을 뿐더러 지역사회와 이웃은 그에게 부정적이었다. 남편의 청각 문제나 산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도 없었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위협에 처한 민주주의

지난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그간 주로 빈곤을 설명할 때 사용되곤 했다. 사회적 배제는 왜 빈곤이 재생산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유용한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제는 오늘날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데도 활용성이 높은 개념이다. 노리나 허츠 (Noreena Hertz)는 사회적 유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인 『고립의 시대』에서 국가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이 주변화 되었다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면 사회는 분열되고 양극화되며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고 말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도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가 외로움을 기반으로 삼음을 강조하면서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개인적 자아를 투항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트럼프의 재집권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아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이라면,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미국의 대통령

1) Pierson, John.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인 트럼프를 봐야 한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가능했던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신자유주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갖고 있는 분노이다. 트럼프 1기에 개봉된 영화 <조커>는 중반부에 고립된 하층계급 남성의 분노가 가져온 파국을 보여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분노는 감정이다. 감정은 일상에서 작동한다. 일상에서 겪는 경험이 커커이 쌓여서 특정한 감정으로 만들어지고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 문제는 사회에 자리가 없는 이들의 분노가 집합화하고, 그 분노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위협하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세상이 불안정하고 일상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과 동일시되곤 한다.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 좋은 세상의 경험은 일상에서 이뤄진다. 일상이 취약하게 되면 개인의 삶은 위협에 빠지고, 위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것은 분노가 되며, 분노가 집합화될 때 체제는 위협해진다. 기존 체제를 그저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위협해진 상황에서 분노를 양식으로 삼아 구원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들이 오히려 더 체제를 위협하게 만들고 취약한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의 집합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협동조합은 일터이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인 의지의 결사체이면서 교류의 장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조직이기에, 그 자체로

지역사회 성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개인들이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풀뿌리의 전형인 셈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서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어하는 역할을 협동조합이 할 수 있다는 상상 말이다. 실은 상상만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민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상식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런데 폴리스는 공적 사안을 논의하는 장이었으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이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자격이 시민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시민이 만든 것이며,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소수였다. 소수만이 공적인 사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부 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하겠지만, 공적인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증가할수록 민주주의는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신진욱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평등한 주체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 개념임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²⁾

한편, 시민에게 부여되는 자유와 평등은 권리이다. 그런데 그것의 작동은 공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2) 신진욱, 2009. 『시민』, 책세상.

을 이야기할 때 책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유롭고 평등해진다는 것은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소속되지 않을 때 자유와 평등은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존재라는 것은 시민이 공동체 내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말한다. 즉, 시민은 공동체 내에서 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책무와 권리,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³⁾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시민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생각해 보자.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는 그들만의 것이었다.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비로소 자유와 평등이 만민의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시민으로서 지위를 누린 것은 오직 남성 부르주아뿐이다. 시민이라는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도전과 함께 시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비시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은 배제에서 참여로의 전환이다. 이는 당사자들에게는 근본적 변화가 된다.

수남은 어떻게 살았을까? 최소한 수남이 법적·제도적으로 시민, 즉 국가의 성원으로서 공식적 지위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취업을 할 수 있었으며, 집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쉼 새 없이 일했던 그는 세상물정을 알지 못했다. 삶의 목표는 오직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완쾌해

3) Jenson, Jane. 2001. "Building citizenship: Governance and service provision in Canada, Building citizenship: Governance and service provision in Canada", Building citizenship: Governance and service provision in Canad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Incorporated. pp. 9-28.

서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으니, 당연히 공동체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고립된 상황에서 사적 세계에만 머물렀다. 그러니 그의 삶은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으로 형식적 지위는 가지되, 실질적인 시민은 아니었던 것이다. 법적·제도로 시민이되, 정치적·사회적으로는 비시민인 존재. 수남만 그럴까? 신진옥이 말하는 시민은 ‘형식적 시민’이 아닌 ‘실질적 시민’이다. 실질적 시민은 자각하고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수행(perform)하면서 형성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역사는 바로 시민 형성의 역사이기도 했다.

시민을 형성시켜 온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역사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지배 속에서 협동조합이 동원되었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저개발 국가들에서 협동조합은 종종 경제개발의 도구로 이용되곤 한다. 한국 역시 과거 경제개발을 목표로 국가의 강력한 동원이 이뤄지던 시절, 정부는 국민들을 동원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출처로서 협동조합을 바라보기도 했었다. 아직 소멸되지 않은 ‘관제협동조합’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역사가 남긴 상처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을 이러한 ‘관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보곤 한다. 하지만 순수한 역사는 없는 법이다. 비록 아름답지 못한 시절과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시민들을 만들었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다 알고 있듯이 협동조합의 시작은 노동자들의 결사체다. 농업

혁명과 부르주아혁명으로 묶어지는 이중혁명은 인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노동자들은 이 전환기에 새로운 집단으로 세상에 등장했지만,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존재였다. 당대의 도시 노동자들은 ‘백인노예’로 지칭되었으며, 당시의 공장은 ‘완화된 감옥’ 또는 ‘완만한 인간 학살장’으로 불릴 정도였다.⁴ 노동자들의 삶은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이 결사였다.

결사를 했다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위계적이 아닌 동등한 관계였음을 말한다. 위협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활동은 상호부조를 시작으로 해서 소비와 유통의 조직화, 공동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처음에 그것은 자신들에게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식의 각성과 함께 운영의 원칙이 정립되면서 그것은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 해방의 무기로 발전한다.⁵ 이렇게 등장한 협동조합은 차츰 노동자들을 넘어 다른 집단까지 확장되고, 활동 무대도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된다. 심지어 국가의 제도화 이전에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것도 협동조합이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당사를 넘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게까지 협동조합 성원의 범위를 넓힌 큰 사건이기도 했다. 이것이 가져온 것은 물론 협동조합의 영토 확

4) 장원석. 1985. “근로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성과 이념적 함축성”. 『노동경제논집』, 8: 83-100.

5) 김신양. 2021. 『처음 만나는 협동조합의 역사』. 착한책가게.

장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함께 이뤄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시민의 확대이다. 왜 그럴까?

노동자들은 결사를 해서 조직을 만들었다.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소속된 곳을 만든다는 것이다. 비록 노동의 장에서는 고용되어서 통제받는 삶이지만, 자신들이 만든 조직에서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원칙을 만들고 재정을 조달하며, 목표를 공유한다. 또한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즉, 책무와 권리가 수반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민으로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역사는 노동자에서 시작해 민중 전반으로 성원들을 확대시켜 갔다. 그러니 협동조합의 역사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시민으로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신협(신용협동조합), 노협(노동자협동조합), 생협(생활협동조합) 등의 등장과 확산은 민중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닌, 협동조합을 통해 민중의 일상에서 보호와 교류를 확장하고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비록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이 온전히 협동조합의 역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민중들의 삶의 문제에 대응해 온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가 시민사회의 성장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에 내재된 시민 형성의 기제

시민 형성과 협동조합의 관계를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협동조합에 내재된 조직 특성이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

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여기서 사업체의 표기어는 'Enterprises'이다. Enterprises를 흔히 기업(Business organization)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는, 종종 어려운 프로젝트나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취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협동조합이 갖는 사업체로서의 성격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니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가 아니라 결사로 만들어진 사업체인 것이다. 그런데, '함께'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협동조합의 원칙일 것이다. 사실, 이미 결사가 시민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원칙도 시민의 형성을 위한 원칙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CA가 가장 최근에 제시한 1995년의 7대 원칙을 유심히 살펴보자.

1995년의 7대 원칙은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⑥ 협동조합 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이뤄져 있다. 이중 ①은 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로 이해된다.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를 상정한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을 덧붙였다. 이는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롭고 평등한 주

체의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②는 조직의 주인이 누군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③과 ⑥, 그리고 ⑦은 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는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은 예측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이다. ⑤는 역량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역량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⁶ 그래서 시민은 역량을 갖춘 존재이기도 하다.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이들은 정보도 취약하고 자신의 역량을 기를 의지와 기회를 갖기 어렵다.

더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의 그물망에 포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시민을 형성하는 조직이다. 다시 앞으로 가보자. 수남의 삶에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수남과 그의 남편이 일하던 공장이 노동자협동조합이었다면, 아마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었을 것이다. 설사 다쳤더라도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수남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알았다면, 남편의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해 나갔을지도 모른다. 만약 주택협동조합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집을 사는 것과 인생의 행복을 동일시했던 수남의 삶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수남이 어느 협동조합의 성원이었다면, 동료 조합원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유용한 정보와 정서적

6) 마사 누스바움(Nussbaum, M). 2018. 『역량의 창조』. 한상연 옮김, 돌베개.

위안감을 제공해 줬을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영화에서처럼 고립과 과중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협동조합이 매개가 되어 참여를 경험하고, 관계를 확장하며, 사유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즉, 사회에 자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립되고 가난한 나머지 자기 자리를 갖지 못한 개인으로서의 수남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역할을 하는 수남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협동조합의 과제는 무엇일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주제넘은 일일 지 모른다. 하지만 서생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마디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협동조합의 그물망 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고 싶다. 개별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안심마을 공동체를 보자. 안심마을공동체는 안심1동, 안심3동과 4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기관, 풀뿌리 조직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상생하는 마을공동체이다. 최근에는 인근 혁신동까지 공동체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처음 장애·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시작했던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협동조합과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자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이 이 공간으로 유입되었고, 안심마을공동체가 포괄하는 돌봄의 망은 점차 확장된다. 이 망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며, 주민들은 함께 먹거리를 구입하고 식사를 한다. 기후 위기에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며, 지역 안팎의 다양한 집단 및 조직들과 연대를 한다. 어쩌면 대구라

는 지역에서 제7회 지방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 이 지역이 진보적인 후보를 기초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활동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

안심마을공동체가 보여준 그물망의 확대는 협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협동조합은 ‘함께 하는 장소’이며,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민을 형성했다. 그리고 시민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기반이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위험해진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을 협동조합의 그물망 안에 포함해야 한다.

커먼즈와 사회 전환

권범철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부소장, 동아대학교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예술과 공통장』(2024)이 있으며, 돌봄, 생태, 예술을 공통장(커먼즈)의 관점에서 엮어서 사고하며 활동하는 데 관심이 있다.

✉ paledall@gmail.com

핵심어: 커먼즈, 돌봄, 사회 전환

커먼즈(common)라는 말이 자주 보이고 들린다. 아무래도 생소한 말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커먼즈라는 운동 혹은 삶의 양식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다.¹⁾ 그럼에도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외국어여서만은 아니다. 그 용어가 가리키는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낯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우리는 공통의 삶보다는 각자도생에 이미 익숙해져버린 것 같다. 하지만 커먼즈는 사라졌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며 가끔씩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선 그 용어를 살피면서 시작해 보자.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영역들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커먼즈, 함께 움직이기

요즘 영어 commons는 한국어에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된다. 공유지, 공유재, 공동자원, 공동자원체제, 공통재, 공통장, 공통계, 공통체 아니면 그냥 음역해서 커먼즈(커먼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는 그냥 공유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용어가 생겨났을까? 우

1)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커먼즈(the commons)라는 말이 자본주의 이전의 공유된 공간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마지막의 ‘-s’를 떼어내고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그 용어가 가리키는 양상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 역시 커먼즈를 단지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늘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런 점에서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선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있다는 건 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래서 자주 이야기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선택한다는 건 그에 대한 이해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 공유지라는 말 하나로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그 영역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말들이 덧붙여지면서 다양한 관점을 내포한 여러 용어들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공유지라는 말로는 왜 불충분한가?

공유지는 한자로 ‘共有地’라고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간단하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으로 풀이한다. 한자를 그대로 옮긴 말이라고 해도 좋겠다. 우리말샘 사전도 이와 같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조금 다른데 “둘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땅”이라고 정의한다. 앞 두 사전과 다르게 “이용하는”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중요하다. 소유와 이용은 큰 차이가 있고, 많은 커먼즈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커먼즈는 공동으로 소유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커먼즈는 함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적인 사례에서 그 흔적을 살펴보자.

커먼즈라는 용어가 처음 중세 잉글랜드 재산법에 등장했을 때, 이것은 공동체가 사용했지만 소유하지는 않은 목초지, 어장, 숲, 토탄지 등의 자산을 뜻했다. 공통인(commoner)²은 이 자원을 소유하

2) 영어 사전에서 commoner는 (귀족이 아닌) 평민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커먼즈 담론에서 이 용어는 커먼즈를 함께 만들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집합적 주체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공유인, 공통인, 혹은 음역하여 커머너로 불리는데 이 글에서는 공통인으로 쓴다. 참고로 이 글은 common으로 시작하는 여러 표현들을 (commons를 커먼즈라고 쓸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으로 옮긴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이 표현이 커먼즈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는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했다.³ 이러한 커먼즈, 특히 숲은 중세의 자급자족 경제 단위인 장원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중세 연구자 비렐에 따르면 당시 나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것보다 훨씬 널리 사용되었다. 나무는 건물을 짓고 가구를 만들며 불을 지피고 요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었다. 토탄과 석탄이 연료로 이용되긴 했지만 나무에 비하면 이용량이 매우 적었고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또한 나무는 경작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삽, 갈퀴, 팽이, 도리깨 같은 도구를 만드는 데도 필수적이었다. 숲이 농촌 공동체에 제공한 가치는 목재의 공급에 그치지 않았다. 숲은 말과 소, 양을 방목하기 위해 필요한 초지를 제공했으며, 도토리나 너도밤나무 열매가 있는 돼지 먹이의 공급처이기도 했다. 이처럼 숲은 무수한 필요에 부응했다. 숲의 “나무가 바로 에너지의 원천이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이용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소작인들은 무상으로 혹은 낮은 비용으로 나무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주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공통권(common right)은 자신의 소득 증대를 막는 장벽이었다. 따라서 공통권은 다양한 압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영주와 공통인들 간의 분쟁이 자주, 때로는 폭력적으로 일어났다.⁵ 이처럼 중세 장원은 각 신분이 사회질서에서 주

3) Caffentzis, George. 2016. “commons.”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ed. Kelly Fritsch, Clare O'Connor, AK Thompson. AK Press.

4) 피터 라인보우.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정남영 옮김. 갈무리. 64.

5) Birrell, J. 1987. “Common Rights in the Medieval Forest: Disputes and Conflicts in the Thirteenth Century.” Past & Present (117): 22-49.

어진 위치를 받아들인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계급투쟁의 무대였다.⁶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커먼즈가 공동의 소유라기보다는 소유에 대한 부정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숲이 있다고 커먼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숲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 사실 숲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 그 숲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그 숲은 커먼즈가 된다. 그러니까 커먼즈는 우리가 공유하는 재화만은 아니다. 숲이 그렇듯 어떤 재화든 저절로 커먼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 — 공동체라고 해도 좋겠다. — 이 소유와는 다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대상과 관계 맺을 때 커먼즈가 생겨난다. 그래서 커먼즈에는 어떤 재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이 뒤얹혀 있다. 여기서 “사이”는 재화와 사람 사이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도 하다. 혹은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 재화라고 명명된 자연, 예를 들어 숲 속의 숲한 생명을 고려한다면 동물과 식물과 돌과 흙과 물 등등의 사이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커먼즈의 역사가 피터 라인보우의 말처럼 커먼즈는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물질적 사물”이다.⁷ 이것은 커먼즈가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깝다는 걸 보여준다. 그것은 어떤 외연을 가진 물질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우리의 관계 맺기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어 common은 (현대의 영어 사전에는 명사와 형용사 용법만 나와 있지만) 본래 동사 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6) 실비아 페데리치. 2011.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김민철 옮김. 갈무리. 53.

7) 라인보우, 앞의 책, 22.

여기서 잠깐 common의 어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삶의 영역을 좀 더 풍부하게 알려준다. 형용사로서 common은 1300년경 “모두에게 속한, 공동으로 소유되거나 사용되는, 일반적인” 등을 의미했다.⁸ 이는 비슷한 뜻을 가진 프랑스어 comun(현대 프랑스어로는 commun)과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라틴어는 “공동으로 보유된”이라는 뜻의 원시 인도유럽어 ko-moin-i-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ko-는 “함께”를, moin-i-는 “변화하다, 가다, 움직이다”(를 뜻하는 어근 mei-에 접미사가 붙은 형태)를 뜻한다.⁹ 따라서 common은 본래 ‘함께 변화하다, 함께 가다, 함께 움직이다’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커먼즈를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커먼즈는 함께 움직이며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moin-i-는 “의무, 공적 의무, 기능”을 뜻하는 라틴어 munia의 어원이기도 하다.¹⁰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함’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도 알게 된다.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 혹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서로에게 — 여기에는 함께 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생명도, 사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의무를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무는 우리가 전적으로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 타고난 취약성 — 혼자 살 수 없다 — 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돌봄은 우리의 존재론적 조건

8) 피터 라인보우.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정남영 옮김. 갈무리.

9) Online Etymology Dictionary. ‘common’ 항목. <https://www.etymonline.com>

10) ibid.

이다. 따라서 우리는 커먼즈를 다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데 그 과정은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돌봄은 커먼즈를 구성하는 원리로 나타난다. 한편 common의 동사 용법과 명사 용법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14세기 중반 그 용어는 “공동으로 참여하다, 관계를 맺다 또는 거래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었으며, 명사로서 1300년경에는 “동료애 또는 형제애”를, 14세기 초에는 “공동체나 마을의 사람들, 자유민, 시민”을, 15세기 후반에는 “공동으로 보유한 땅”을 의미했다.¹¹⁾ 이 모든 것은 커먼즈가 ‘함께 함’이 품고 있는 속성 — 형제애, 즉 연대 — 이나 그 양태 — “공동으로 참여하다, 관계를 맺다” — 혹은 그로 인한 주체적 특징 — “공동체나 마을의 사람들” — 을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 의미를 포괄하는 그 성격 때문에 공유지라는 말은 커먼즈를 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중세 장원의 숲 커먼즈만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공유되는 재화나 자원이라기보다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가깝다.¹²⁾ 공유지라는 단어로는 불충분한 이유다. 커먼즈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러한 공동자원 관리 제도로서의 커먼즈에 대한 연구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는 주로 연안 어장, 소규모 목초지, 지하수 지대, 관개 시설, 그리고 지역 공동 산림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실 세계의 커먼즈가 (하딘이 이야기한 ‘비극’

11) ibid.

12) 피터 라인보우.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정남영 옮김, 갈무리.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는 공동체와 그들이 스스로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원을 공동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커먼즈는 지역의 소규모 자연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세의 숲 커먼즈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의 숲 커먼즈가 자급 경제의 일환이라면 오스트롬이 연구한 소규모 공동자원 관리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일환이다. 한 마디로 커먼즈가 놓여 있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 전자가 땅 없는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순환 경제의 터전이라면, 후자는 그 경계 안에서는 자원을 공유하는 수평적인 조직일지라도 결국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커먼즈는 국제 시장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한 마디가 된다.

그래서 커먼즈 내에서 (비)인간 생명 및 사물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도 중요하지만 커먼즈가 자신의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역시 중요하다. 후자를 망각할 때 우리는 커먼즈의 정치적 의미를 놓치기 쉽다. 커먼즈 내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더라도 결국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현상 유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닷가재 어장에서 알프스 산의 목초지까지 상품을 생산하는 커먼즈다. 조지 카펜치스는 오스트롬이 연구한 그러한 커먼즈를 친자본주의적인 커먼즈라고 불렀다. 그는 오스트롬과 그 동료들이 커먼즈를 좋은 제도 설계의 문제로 이해한다고 본다.¹³ 그 설계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13) Caffentzis, George. 2012. "A Tale of Two Conferences: globalization, the crisis of neoliberalism and question of the commons." *Borderlands* 11(2).

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의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말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커먼즈는 기존 질서를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기 쉽다. 오늘날 위기를 감지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체제 전환과 같은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말이다.

커먼즈와 사회 변화

그러면 커먼즈가 단순히 기존 사회의 보충물에, 따라서 결국 현상을 유지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꾼다는 과제에 있어 사회 운동은 전통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폐지하는데 주력해 왔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바꾸는 것 혹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혹은 ‘구조’를 바꾸려는 활동이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운동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변화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위해’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기보다 새로운 사회를 지금 여기에서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예시적 정치”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이를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형식의 사회성을 창출하여 이미 자유로운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직접행동의 원리”¹⁴로 정의한다. 짐작한 대로 커먼즈는 후자에 가깝다. (불법)점거 공간을 뜻하는 스쿼트(squat)은 흔히 예시적 정치의 도시 커먼즈 사례로 종종 언급되는데 스쿼트에 대한 존 홀러웨이의 언급

14) 데이비드 그레이버. 2016. 『아나키스트 인류학의 조각들』. 나현영 옮김. 포도밭출판사. 25.

은 예시적 정치의 성격을 잘 정리하고 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세계에서, 아직 실존하지는 않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시간이다. 우리는 아직 실존하지 않는 세계를, 그 세계를 삶으로써 창조한다. ... 스와터들은 빈집에서 살기 위해 사적 소유와 지대의 폐지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빈집에서 살 뿐이다.¹⁵

이처럼 커먼즈는 무언가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구성적이며 수행적인 실천이다. 이는 그 활동의 결과물이 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과정과 그 결과물인 그림은 분리된다. 그림은 붓질 ‘이후에’ 완성되어 갤러리에 걸린다. 이와 달리 연극은 그것의 수행 과정이 결과물이다. 무대에서 표현되는 대화와 몸짓들, 그리고 그것들이 얹혀 상연되는 과정 자체가 결과물이다. 예시적 정치란 “자유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그레이버의 말에서 우리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커먼즈는 연극과 같다. 어떤 사회를 ‘이후에’ 만들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아직 실존하지 않는 세계를” 연기하듯이. 그래서 커먼즈는 내가 생각하기에 —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제도라기보다 삶의 양식이다.

오늘날 도시에서 중세의 숲과 같은 커먼즈를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도시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커먼즈를 찾

15) 존 홀러웨이. 2013. 『크랙 캐피털리즘』, 조정환 옮김. 갈무리. 346-7.

을 수 있다. 가령 『커먼즈란 무엇인가』(빨간소금, 2024)를 쓴 한디디는 도시에서 나타난 다양한 함께 살기 실천들을 커먼즈의 사례로 보고한다.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 <빈집>, <경의선공유지>, <빈고> 등 그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이 사례가 알려주듯 커먼즈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순간 어디에서나 생겨난다. 흥미로운 건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많은 커먼즈들이 비슷한 원리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맛시모 데 안젤리스는 공통화의 형태로 사회적 노동을 가동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먼저 공동 노동이 공통인들의 공동체가 회의에서 정한 특정한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 노동이라면, 또 다른 방식인 호혜 노동은 호혜성이나 선물 혹은 상호부조에 대한 지각과 얽혀 있는 사회적 노동형태다. 이 두 노동은 구별되지만 상호보완적이다. 공동 노동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체가 협력하는 노동을 나타낸다면, 호혜 노동은 호혜성의 순환을 통해 공동체의 사회 구조를 짜는 것이다. 가령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빈 터를 정리하거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공동 노동이라면, 품앗이는 호혜 노동이다.

데 안젤리스는 농경 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이 두 가지 공통화 형태가 현대 도시에서 새롭게 재발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나타났던 미국과 스페인의 주택 압류 반대 운동을 예로 든다. 활동가 집단은 거주민이 은행 집행관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는 도움을 받은 그 거주민이 투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혹은 초대)하여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

도록 이끈다. 여기에는 압류에 저항한다는 공동의 사업과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항에 힘을 보태는 호혜성이 함께 있다. 데안젤리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는 메트로폴리스의 개인화 경향에 중대한 파열을 나타낸다.”¹⁶ 한디디가 언급한 그 사례들 역시 도시의 개인화 경향에 일어난 “중대한 파열”로서, 새로운 사회를 스스로 살아가는 실천들로 보아도 좋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열들은 사회 변화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 걸까? 펠릭스 가타리는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구조가 아닌 국지적인 영역에 주목하는데 후자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욕망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본질적인 것은 무수히 다양한 분자적 욕망의 접속이며, 이것은 ‘눈덩이 효과’를 지니며 대규모 힘 대결로 나아간다.”¹⁷ 가타리가 생각하는 사회구조는 “외부에 설립된 불변항의 견고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미세한 삶과 국지적인 영역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의 일부”인 것이다.¹⁸ 우리가 구조를,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우리의 삶 및 욕망과 연결된 관계망의 일부로 이해한다면, 분자적 욕망의 접속과 그에 따른 눈덩이 효과의 강도가 임계점을 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16) De Angelis, Massimo.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Zed Books. 2017. 219.

17) 펠릭스 가타리. 2004. 『분자혁명』. 윤수중 옮김. 푸른숲. 66.

18) 신승철, 2019. 『모두의 혁명법』. 알렘. 407.

덧붙일 이야기

특이한¹⁹ 욕망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멋지고 신난다. “그들은 단지 빈집에서 살 뿐”이라는 홀러웨이의 말 역시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 그래서 종종 인용한다. — 덧붙여야 할 이야기가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건 부정과 구성의 연결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통적인 사회 운동과 예시적 정치의 대비는 분명해 보인다. 전자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한다면 후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아니라 연결해야 할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즉 정부/기업의 활동을 저지하고 의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캠페인 등은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제도에 주력하는 운동에서는 대안적인 일상, 삶의 양식에 대한 고민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외부와 단절된 채 “실존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종종 스스로 그은 경계에 갇히곤 한다(이럴 경우 ‘눈덩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높은 경계를 쌓더라도 외부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뿐더러 스스로 고립된 그들의 공동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요컨대 이 두 부류의 운동은 각각 부정과 구성에만 집중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니 비록 커먼즈를 구성과 가까운 것으로 이

19) 여기서 ‘특이하다’는 단순히 남다르다는 의미를 가진 일상 용어가 아니라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를 뜻하는 철학 용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배적인 질서로 완전히 포섭되거나 흡수되지 않는 활동을 가리키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쓴다.

야기하긴 했지만 둘 사이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이 기존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구성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이다. 구성이 없는 부정은 역설적으로 기존 질서에 간헐 수밖에 없고 부정이 없는 구성은 자기기만적일 수 있다.

그럼 이 두 활동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언급한대로 많은 사회 운동은 제도를 바꾸거나 새롭게 수립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다.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소수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 물론 이 제도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수립만으로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한국에서 대책 없이 진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을 보자. 이 사업들이 계속되는 건 제도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자본의 대리자로서의 권력자가 마음을 먹은 순간 기존의 규제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 바깥에서 기존의 규제를 해제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거나, 사업 관련 영향평가를 조작한다. 기존의 제도를 우회할 방법은 법/제도 기술자들에 의해 늘 마련된다. 힘들게 마련한 제도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제도와 법은 그냥 종이 위에 인쇄된 활자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제도와 모델과 규칙만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배치와 관계망의 변화가, 즉 커먼즈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공적인 것을 공통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커먼즈 담론에서는 공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을 구별한다. 가령 페데리치와 카펜치스는 공적인 것을 “국가에 의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소

유, 관리, 통제, 규제되는 것”²⁰으로 정의한다. 반면 공통적인 것은 “우리 삶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고, 집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힘을 되찾는 것”이다.²¹ 이들의 말처럼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둘 사이를 떼어놓기보다는 공적인 것을 어떻게 공통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달리 말하면 공적인 영역을 국가의 관리에만 내버려두지 말고 커먼즈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여러 현장에서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종종 접한다. 국가가 돌봄을, 교육을, 의료를, 주거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해당 영역을 국가가 알아서 조직하라는 요구(여서)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을 직접 조직해서 이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아이를 아예 국가에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 우리는 삶에 대한 자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관리에 크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²²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 커먼즈는 이러한 욕망에서 출발한다.

나가며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한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시스템이 나와

20) 실비아 페데리치·조지 카펜치스, 2020.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권범철 옮김. 『문화/과학』 101. 189.

21) 같은 글. 188.

22) 실비아 페데리치, 2013. “가사노동에 대항하는 임금.” 『혁명의 영점』, 갈무리.

동떨어져 객관적으로 작동하는,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언가로 여기기 쉬우며, 그에 따라 자신은 늘 피해자로 남는다. 이는 우리에게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자신의 연루를 스스로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본세(Capitolocene)는 관계성에 의해 만들어졌”²³다는 도나 해러웨이의 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시스템을 객관적인 구조가 아닌, 내가 이미 충분히 접속된 관계망 혹은 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가해자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위기에 책임이 있다’와 같은 무의미한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집합적 주체가 조직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커먼즈는 다른 무엇보다 그 ‘우리’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며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커먼즈는 물론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지만 ‘우리’에 갇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 만들어낸 균열선을 따라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 질서를 그 내부에서 ‘오염’시키는 아래로부터의 전략일 것이다.

23) 도나 해러웨이, 2021.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 옮김, 마농지, 92.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커먼즈

김지음 빈고 책임활동가

빈고 활동가. 2008년 해방촌 주거공동체 빈 집의 시작을 함께했고 이후 협동조합 빈가게, 카페 해방촌, 해방촌연구소, 자전거메신저 등을 하며 빈마을을 이루며 함께 살았다. 2010년 공동체은행 빈고를 함께 만들고 현재까지 주로 재정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2019년 공유주거협동조합과 빈땅조합을 함께 만들고, 충남 홍성에 공유주택 키키를 함께 짓고 살고 있다.

✉ antiorder@gmail.com

핵심어: 커먼즈, 금융협동조합, 빈고, 사양, 탈자본

빈고¹⁾는 ‘함께 가난하기로 하는 사람들’의 금융협동조합입니다. 금융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공동의 자원을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커먼즈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오래된 삶의 양식입니다. 금융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돈을 모아 공동의 자원을 만들고,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커먼즈의 개념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운동입니다. 만약 금융협동조합이 커먼즈라는 사실이 낯설다면, 그것은 아마 금융자본이 우리의 삶과 커먼즈를 철저하게 훼손하고 있고, 금융협동조합이 이를 충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자=소비자=조합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수입을 얻고, 소비자로서 지출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도 소비자로서도 항상 자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자본에 의해 고용되어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비자로서 자본이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활 수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자본이 없이는 우리는 일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해야할까요? 아마도 반대가 진실일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본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상

1) 빈고 홈페이지 bingobank.org

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본을 상대하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자본과 대결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본의 착취에 저항하는 파업을 벌이거나 사측과 협상하여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의 현장에서 자본의 폭리와 부정에 맞서 자본의 상품을 거부하는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통해 자본의 생산 방식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운동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본가를 배제하고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생산자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자본의 상품이 아닌 협동조합의 생산물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소비를 조직하여 소비자에게 생명과 가치와 이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 경제를 이룬다면, 여기에 자본의 횡포가 설 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과 대결하며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소비운동, 그리고 생산-소비 협동조합운동은 모두 큰 틀에서 함께하는 탈자본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우리는 모두 자본과 대결하는 노동자=소비자=조합원으로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노동자=소비자=조합원으로서 자본에 맞서 함께 굳건하게 손잡고 대항할 수 있다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본

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끼리의 단결이 쉽게 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자본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더 심한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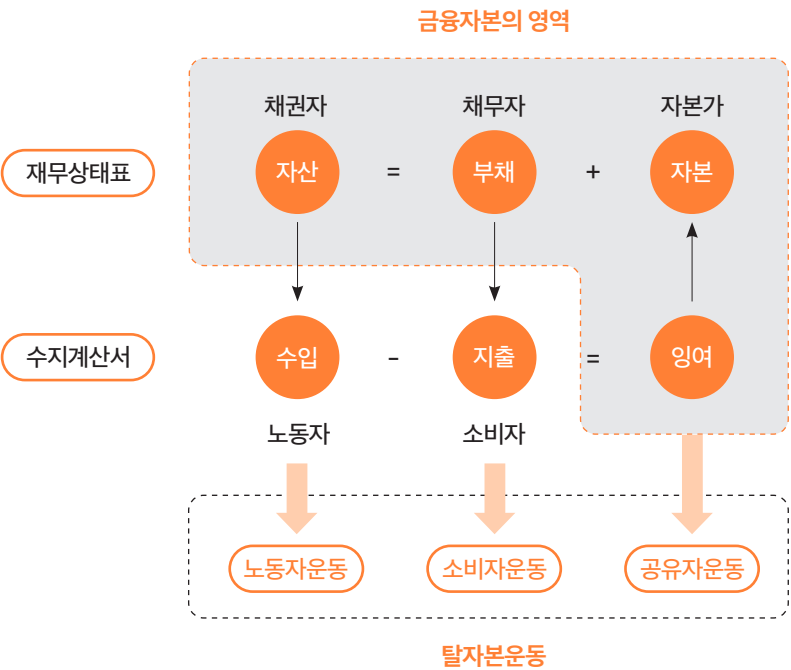
자본을 다투는 우리

현대 금융자본주의에서 돈이 많은 사람의 돈만 자본인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는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계좌가 있고, 많은 적든 각자의 돈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은행이 갑자기 파산한다면 모두가 난리가 나서 서로 돈을 찾으려 몰려들거나, 국가가 은행을 지켜야 한다고, 자신의 돈을 보장해 달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빈자가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 부자와 빈자가 얼마 전까지 자본가와 노동자로, 자본가와 소비자로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은행과 화폐는 모두의 것이거나,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소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자본과 대결해 오던 사람들이 자본가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었을까요? 사실 은행에 있는 압도적으로 많은 돈은 대부분 자본가의 것이고, 은행은 그동안 많은 돈을 자본가에게 대출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수익을 분배해왔습니다. 사실상 은행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금융자본의 핵심에 있으며, 우리가 탈자본운동을 한다면 반드시 대결해야만 하는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본의 은행

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돈이 자본의 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돈이 은행을 통해 자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에 위기가 생기면 내 돈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돈의 액수가 적더라도 그것의 소유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적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다시 사태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노동자로서 수입을 얻고 소비자로서 지출을 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조금 많다면 저축을 해야 하고 지출이 더 많다면 대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계부는 보통 아래 그림에서 수지계산서와 같이 적혀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탈자본의



노동자=소비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잉여와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잉여는 나중에 소비할 것이고, 손실은 서로 조금씩 도울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과 부채의 규모가 점점 커져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단순히 수지계산만 하는 가계부로는 부족하고 재무상태표를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을 사용하고 자산의 등식과 수지의 등식은 서로 겹칩니다. 저축을 해서 자기자본을 만들고, 여기에 부채를 더해 전체 자산을 확보하면 자산은 자산수입을 만들어내고, 부채는 이자지출을 만들고, 자산수입에서 이자지출을 뺀 금액이 자본수익이 됩니다. 약간 복잡해보일수도 있지만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 돈에 대출을 좀 더해서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구입하면 월세 집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된다는,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하고 있는 금융생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 만나게 되는 화폐의 다른 국면들에서 우리는 자본가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서고, 부채를 끌어올 때는 채무자의 입장에 서고, 자산과 부채를 잘 관리해서 자본수익을 만들 때는 자본가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영역은 금융자본의 영역이고, 여기서 우리는 자본가와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히 자본가처럼 사고해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관점에서 노동에 따른 소득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과 시험과 취업시장에 투자해서 획득한 직업이라는 자산이 만든 수익입니다. 소비 역시도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과 투자 상품, 대출상품에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얻는 또 다른 수익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소비자=조합원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자운동이 성공을 거두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자운동이 성공을 거두면 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본과 대결해 얻은 노력의 결과로 잉여가 늘어나고 저축이 늘어 자기자본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금융자본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운동과 소비자운동을 할 때 우리는 자본과 대결하며 단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영역에서 우리는 각자 가진 자본의 크기가 다르고, 보유한 자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각자가 최대의 자본수익률을 위해 만인이 만인에 대해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동자를 착취해야 하고, 소비자를 수탈해야 합니다. 노동자=소비자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길 바란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자본가와 함께 정리해고와 이윤추구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승리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지지할 수 있지만, 그 소득이 금융자본이 되어 다른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면 단결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운동과 소비자운동이 성공할수록 우리가 단결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 구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자본의 영역에서도 자본과 대결하는 운동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가난한 은행

신용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금융 기관으

로,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떤 신용협동조합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자금을 공급하며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기에 조합원들의 자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변화와 역설이 발생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가난할 때 신용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자산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조금씩 부자가 되어간다면 신용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조합원들이 이제는 대출을 끌어 주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고, 더 높은 이자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저축은행에 예금하려고 한다면 조합원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신용협동조합은 빈자를 위해 만들어졌고, 빈자를 작은 부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자 작은 부자들은 이제 조합이 부자를 위한 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용협동조합이 일반 은행을 따라서, 은행보다 더 모험적인 자산운영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은행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빈고는 조합원을 부자가 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지금보다 더 부자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이미 지구 용량의 1.7배를 쓰고 있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은 지구상에서 상위 10% 부자에 해당하고 있어, 모두가 이렇게 살려면 지구가 5개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각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우리는 많

은 것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 자체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자산으로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스스로 자본가가 되어 다른 노동자=소비자=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수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이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단결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빈고가 고민했고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의 문제는, 현실에서 우리는 각자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격, 취향, 재능 등의 차이도 물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했던 반면, 각자가 가진 돈의 차이는 우리 사이에 차별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체로 모두 가난했지만 우리 공동의 집을 구할 때, 누군가는 전셋집을 누군가는 월세 집을 구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오직 고시원 밖에 살 수 없었을 정도의 차이는 대단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한 공유공간을 위한 돈을 모으고, 돈의 차이가 있어도 자유롭게 평등하게 함께 사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 냈어야 했습니다.

빈고를 만들게 된 목적은 첫 번째 공동체와 공유지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늘어난 사람들이 살기 위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고, 중간에 나가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줄 여윌돈도 필요했습니다. 유동적인 사람들과 돈의 흐름 속에서도 공유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단순히 소비되는 돈을 모으는 것 외에 저축하고, 대출하고, 반환하는 금융의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동체에 출자하고 또 필요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이나 국가의

돈을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는 각자가 가진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출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고정적이어서 자유롭게 출자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들이 출자금의 유무 다소와 무관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에 차별적인 요소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집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시점에서 특히 도드라집니다. 모두가 빈고에 출자하되 출자금과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협동조합으로 구성하고, 함께 빈고에서 이용해서 공동의 보증금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누구든 3명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했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굳이 알 필요도 없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의 공동체와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집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지낼 때 돈의 흐름은 집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내 공동체에 출자할 수는 있지만, 옆의 공동체에 출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어도 평등하게 지내며 교류하려면 공동체들 간에 그리고 공동체 외부로 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2010년 만들어진 빈고는 이제 어느덧 15살이 됩니다. 현재 518

명의 조합원이 크고 작은 공동체 39개를 구성하고, 약 5.8억의 공유자산을 모아 16개의 공유지/공동체공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빈고를 통해 계약한 공동체공간은 63곳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빈고는 애초에 목표했던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돈이 풍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돈은 늘 공급할 수 있었고, 누적해서 25억이 이용되고 22억이 반환되었지만 큰 탈이 난 적은 없습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돈이 없어서 필요한 공동체와 공유지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적해서 지금까지 약 36억이 출자되었고 32억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출자자가 요청할 때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 출자자의 양해 하에 3개월 정도 지연된 사례 외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해산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진통이 있지만 적어도 돈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금전적인 이득을 특별히 본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희생하거나 피해입지 않았습니니다. 빈고의 공동체들에서 출자금의 많고 적음은 단순한 차이에 불과할 뿐 돈이 권력이 되지 않았고, 모든 조합원은 활동계획을 공유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빈고의 자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빈고 외부의 새로운 공동체들도 빈고와 만나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출자자와 공동체의 돈은 아주 자연스럽게 돈이 필요한 이용자와 공동체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고는 항상 제한된 활동비만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매년 잉여금을 만들고, 꾸준히 적립을 하면서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빈고 외부에서 자본에 수탈되기를 저항하는 곳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빈고는 아직 작지만 금융협동조합으로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은행의 역할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자와 이용은 물론 조합원 간 거래도 하고, 회비를 자동이체하거나, 실손 보험을 대체하는 건강보험제도 운영합니다. 은행과 차이가 있다면 모두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금융과 달리 모두가 자본수익을 사양한다는 것입니다. 출자자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기대 없이 공유지의 확대를 위해 출자합니다. 이용자 역시 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 없이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이용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운영자 역시 자본수익을 거부해서 잉여를 적립하거나 외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가 자본수익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익은 공유지에 남고, 수익을 내지 않는 돈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게 됩니다. 모두의 돈이 모여 공유자원이 되어 공유공간에 활용되고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공유자원이 된다면 이 돈은 자본이 아니라 공유지/커먼즈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이 모든 돈을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기계라면, 우리에게 돈은 공유지로 변환시키는 다른 기계, 금융커먼즈가 필요합니다.

금융커먼즈 : 자본에서 공유지로

우리의 돈이 자본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소액의 자본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모두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수익률에 전전공공하며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 공유지로 전환된다면 어떨까요? 각자의 돈이 모두 공유지로 모일 수 있다면, 원래의 소유자가 누구이든간에 모두의 자원이 됩니다. 누가 얼마나 냈는지의 차이

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두의 자원이므로 누구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후에는 다시 모두의 것으로 되 돌아옵니다. 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 역시 공유지로 돌아온다면 누가 얼마를 이용하든 괜찮습니다. 공유지의 잉여가 외부의 더 고통받는 사람에게 흘러가거나, 외부의 사람을 얼마든지 환대해서 나눠도 괜찮습니다. 공유지와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본수익을 사양하고 있을 뿐이지만 공유지 전체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갈가리 찢어져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이 함께하고 단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소비자=조합원으로서 자본과 대결해왔고, 이제는 공유지를 만드는 공유자로서 자본과 대결하며 자본이 아닌 공유지로서의 돈의 순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수입을 늘리고, 소비자로서 지출을 줄이고, 출자자로서 공유지에 저축하고, 이용자로서 공유지를 활용합니다. 운영자로서 공유자원을 잘 관리하고 연대자로서 외부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자본과는 전혀 다른 돈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계들의 출현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금융커먼즈로 들어온 돈은 자본이 아닌 공유지고, 그 돈의 소유자 또한 자본가가 아니라 공유자입니다. 자본가는 운이 좋으면 자본수익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공유자가 잃을 것은 오직 자본수익에 대한 도착뿐이고 얻을 것은 공유지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공유자로서의 우리는 아직 소수이지만, 새로운 돈과 새로운 은행을 잘 지켜낼 수 있다면, 남은 일은 각각의 현장에서 아직 자본으로 남아 있는 우리의 돈을 시나브로 공유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의 세상을 커먼즈의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역설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렇습니다. 빈고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께하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지만, 그것은 각자가 자본에 의존해서 자본수익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더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각자는 돈을 잘 벌수도 있고, 조금 벌수도 있지만 그렇게 모인 돈이 공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돈이 조금 더 있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함께 살 수 있고, 돈이 좀 없어도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갈등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자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돈을 은행에서 빔고로, 자본의 은행에서 커먼즈의 은행으로 옮겨오는 것은 계좌이체 한 번이면 될 간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종종 후퇴해야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함께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같고 각자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안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탈자본을 지향하는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들도 탈자본을 지향하는 공유자협동조합으로 서로 연결된다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더 힘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들이 만드는 공유지 커먼즈에 빔고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한살림과 커먼즈: 우리를 넘어서 모두를 살리기*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모심과
살림연구소 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전
환을 꿈꾸는 사람들』(공저), 『생태민주주의』,
『커먼즈 다시 그리기』(공저) 등의 저서를 썼
고, 생태전환, 생태민주주의 등에 관심을 갖
고 연구하고 있다.

✉ dwku2@hanmail.net

*
이 글은 구도완, “커먼즈의 눈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정영신 외, 2024, 『커먼즈, 다시 그리기』, 도서출판 풀씨)을 바탕으로 다시 쓴 글이다.

핵심어: 한살림, 커먼즈, 생명운동, 우리 만들기, 모두 살리기, 생태전환

한살림, 생명, 그리고 커먼즈

한살림, 하면 유기농, 먹거리, 생협, 생명, 살림, 공동체 같은 말들이 내게는 떠오른다. 그런데 커먼즈(communs)라는 개념으로 한살림을 보고 거기서 새로운 의미와 실천의 가능성을 엿보는 이들이 있다!¹ 생명운동, 공동체 같은 말이 아니라 커먼즈 즉 공동의 것(들)이라는 눈으로 한살림을 보면 무엇을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관심을 갖고 한살림운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살림운동의 흐름과 미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²

커먼즈란 무엇일까? 커먼즈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 이용, 관리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커먼즈는 제도, 자원, 공동체의 결합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공동체를 포함하며 넘어서는 공동의 것들이라 볼 수 있다.³

왜 커먼즈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까? 자본주의 시장은 사회와 비인간자연을 화폐의 논리 속에서 작동하게 만들었다.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사회와 자연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정치 체계

1) 조미성, 2022. “생명운동이 공동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모심과 살림』, 20호: 114-135.; 김자경, 2020. “협동조합으로 커먼즈 만들기”. 『모심과 살림』, 16호: 136-164.;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ECO』, 22(1): 243-276.

2) 구도완의 글(정영신 외, 2024: 59)에 내가 만난 한살림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의 과업이 되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국가를 민주화하는 운동에 집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모두를 살리는 공동체, 협동을 조직하는 운동을 벌였다. 후자의 운동을 넓은 의미의 커먼즈 운동 즉 공동의 것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커먼즈를 기존의 지배구조를 보완하거나 길들이는 관점에서 보는 이도 있고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보는 이도 있다. 대안으로 커먼즈를 보는 연구자 가운데 정영신은 ‘커먼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한 자치와 협력, 다른 한편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의 확장 and 창안이라는 모순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았다.⁴ 나는 정영신의 커먼즈의 정치 개념을 바탕으로 한살림운동을 ‘우리를 만들면서 모두를 살리는 커먼즈운동’으로 보고 이 두 과정을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한살림은 모든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의 커먼즈운동이다. 한살림 사람들은 삶을 위협하는 산업주의(산업문명), 환경오염,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저항하며 우리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또는 커먼즈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것, 그것이 한살림운동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생명을 살리는 큰일은 작은 우리를 만드는 것에

4) 정영신, 2002.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37-260. 정영신은 두 과정이 모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살림에는 이를 모순으로 보지 않는 이들이 많다. 또한 정영신은 보편적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한살림 사람들은 권리보다는 대안 만들기 또는 스스로 대안되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작했다. 그 우리가 ‘우리끼리’를 넘어서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고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해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우리’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살림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했고 그 의미가 소통되고 확산되면서 오늘의 한살림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살림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생명을 살리는 우리 만들기

한살림운동은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억압과 배제의 정치, 경제체제로부터 모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와 80년대의 많은 저항 운동가들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지배구조를 부수는 데 헌신했다. 그런데 일부의 운동가들은 지배구조를 부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가치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1980년대 형성된 생명운동 그룹이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한살림이다.⁵

한살림운동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86년 한살림농산이 창립된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80여만 명 조합원의 거대한 생협조직으로 발전한 생명협동운동이다. 다른 하나는 1989년 한살림 선언을 발표하고 약 3년간 활동하다가 해소된 한살림모임이 주도한 생명문화운동이다.⁶ 이 두 흐름이 분화되기 전

5) 김소남. 2017.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6) 거칠게 요약하면, 장일순은 초기 한살림운동, 김지하는 생명문화운동, 박재일은 생명협동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한살림모임이 해소된 이후에 김지하의 활동은 한살림운동의 경계 밖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에 한살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의 문명 혹은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과 대중적 협동운동을 통해 생활양식을 바꾸는 일이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명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살림농산을 시작한 박재일은 ‘한살림을 시작하면서’라는 글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해서 “땅도 살리고,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⁷

민주화운동 또는 농민운동을 하던 청년 운동가들이 이 운동을 시작했지만 한살림 공동체가 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하면서 한살림운동의 새로운 주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기부터 한살림에 참여해 조합원 리더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이의 먹을거리를 위해 회원으로 참여했다가 여성들 또는 주부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변화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위해 한살림 회원이 되어 참여하다가 공동체에서 작은 책임을 맡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이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 생협 의 이사, 이사장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살리면서, 모두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을 하려면 같은 뜻을 가진 ‘우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일까? 한살림 생협은 소비자협동조합이므로 형식적으로 보면 조합원들이 ‘우리’일 것이다. 그러나 한살림은 우리끼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생활과 생명을 살리

7) 김선미, 2017. 『한살림 큰 농부: 인농 박재일 평전』, 한살림: 196-199.

고, 땅을 살리는 일이 조직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또는 가치로 소통되었다. 그런데 땅은 어디까지이고 생산자는 누구일까?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적지 않은 토론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경계는 확장되고 변화되어 왔지만 한살림에서 ‘생산자’는 주로 국내에서 유기농,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민 또는 한살림의 원칙에 따라 가공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등으로 한정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다’, 농업 살림 등의 가치는 국내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실천 원칙으로 해석되고 실행되었다.

한살림은 다양한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심을 갖고 모인 하나의 조직이다. 이들은 우리 안의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라는 것이 한살림의 이상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한살림의 사업이 성장을 지속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 사업이 불안해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다. 소비자 조합원의 수가 늘고 조직의 규모가 커지니까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생명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함께 한다는 기본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조직은 점점 복잡해지고 사안에 따라 갈등도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사, 활동가, 실무자로 나누어진 역할에 따른 갈등, 지역 한살림과 한살림 연합 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다.

이런 갈등을 한살림은 협의 시스템을 작동시켜 해결해 왔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한살림 사람들은 생명 살림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윤희근 전 한살림연합 전무는 이야기한다. 그런데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가

진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나 국가와 달리 ‘생명을 살리는 커먼즈’로서의 한살림은 합의를 중시하다보니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유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사결정 방식은 사업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 그러나 한살림이 협동조합 또는 커먼즈인 한, 토론과 숙의를 통한 느린 의사결정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조직한다면 그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커먼즈의 의미와 가치,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의 방향과 속도 등에 대해 얼마나 현명하게 숙의를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환경 변화를 보지 못하거나 변화에 휩쓸려 스스로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잃어버린다면 커먼즈로서의 한살림은 수많은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두 살리기

한살림이 갖는 특이성은 ‘우리끼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과 비인간 자연 즉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결사체이자 사업체로서 스스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윤을 위한 기업이나 조합원의 필요 충족을 위한 협동조합과 달리, 나와 내 아이, 우리를 살리면서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 종, 그리고 땅과 같은 물질들의 집합체를 살리는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 즉 모두 살리기가 한살림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살림이 생협이라는 형식을 택한 것은 모두 살리기라는 조직의 목표를 사업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사업을 통한 가치 실현이 하나의 조직 속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한살림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권옥자 한살림연합 회장은 ‘몸에도 이롭고 자연에도 이로운 물품을 선택해서 밥상을 차리는 실천을 계속한다는 것이 활동이자 운동’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건강이나 생명을 넘어서서 땅과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유현실 한살림고양과주돌봄사협 이사장은 활동이 사업의 뒤로 밀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탈핵, GMO 반대, 우리 씨앗 지키기, 에너지전환, 병 재사용 등의 활동은 물론 기후위기 관련 집회 등에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한편으로 사업 자체가 활동이고 다른 한편으로 활동 또는 운동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할 정도로 활동이 우선되고 있고, 그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있다. 주요섭 전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은 한살림은 사업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은 표면의 움직임 정도’라고 평가한다.

한살림은 지역살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를 넘어서는 활동을 해왔다. 생산자 연합회에서 한 고랑에 농산물을 더 심어서 이를 사회를 위해 나누는 ‘한고랑 나눔 운동’,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동 사업, 돌봄 사업 등이 지역살림과 관련된 활동, 사업들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으로서 한살림은 조합원들과 생산자들의 필요 충족이 주된 과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이런 지역살림 활동들은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은 한국 밖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대하고 있을까? 한살림은 인도 달리트 여성들의 재활사업,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사업 등 국외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살림의 농업살림이라는 원칙은 대체로 국내 농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수입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설탕 같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났다. 가까운 먹을 거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과 민중교역을 통해 해외 농민들의 자립 기반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은 결국 설탕을 수입하되 이에 반대하는 지역 조직은 설탕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면 한살림의 핵심 가치인 생명 살림과 관련하여 한살림은 어떤 일을 해왔을까? 여기서 생명은 인간, 비인간 생명, 그리고 산, 강, 땅 등 생명과 물질의 집합체를 모두 포함한다. 윤형근은 한살림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시키고, 필요 약정 시스템을 작동시켜 종다양성이 유지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소농이나 가족농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규호 전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은 한살림 울타리를 넘어서 생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농업 살림, 밥상 살림을 통한 생명 살림을 실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생명 살림을 모두를 살리는 실천, 사회의 전환으로 이끌어 가는 데는 그리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만들기와 모두 살리기의 관점에서 한살림의 담론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한살림은 모두를 살리는 거대한 전환을 유기농 쌀과 참기름과 같은 물품을 매개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는 나’라는 담론이 소통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여러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발전시켜왔다. 이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누구인지, ‘모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진화해 왔다.

생태전환

나는 한살림운동이 생태전환을 지향하는 커먼즈운동이라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생태전환은 ‘생명의 거주공간으로서 지구의 지탱가능성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생명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현대의 지배적인 구조를 변형해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한살림은 어떤 전환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한 어떤 정치, 어떤 전략을 수행해 왔을까?

문명전환

한살림사람들은 어떤 전환을 지향하는가? 처음 한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람들, 땅, 한국, 한반도, 세계 즉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보자고, 개혁을 하자고 외쳤다. 요즘 말로 하면 근본적인 전환(transformation)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문명 전환의 답론은 주로 한살림모임이 주도했지만 1990년대 초 이 모임이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이 답론의 주창자였던 김지하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한살림운동의 주된 답론이 되지 못했다. 생명을 살리는 문명을 만드는 일은 이제 생협 리더들과 생산자들의 생활 속 실천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초기 한살림 사람들은 문명 전환이라는 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전환이 가능한지 어렵פות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 한살림 선언은 기계문명, 산업문명을 죽음의 문명이라고 보고 이를 넘어서야 하고 그것은 생명, 우주, 한울에 대한 각성

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명, 한울과 같은 기표가 문명 전환을 이끄는 힘이자 정당성의 근거로 구성되었다.

주요섭은 이 담론은 협동조합 경제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다른 협동조합의 담론과 구별된다고 말한다. 한살림의 지향은 ‘자연이 주는 순수증여를 바탕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기 것을 그냥 내어놓는 무언가가 밑바탕에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관계가 있고, 그것이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한살림운동은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복지국가 시스템의 서브시스템(sub-system)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한다. 주요섭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증여와 호혜 또는 상호성(reciprocity)이 작동하지 않으면 한살림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복지국가 시스템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미성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한살림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밖에서 바꾸려는 노력을 한 적은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끼리는 적어도 다르게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바깥의 자본주의를 안에서 넘어보려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한다. 한살림이 생산자와 소비자, 땅과 생명을 살린다는 목표를 갖고 협의 시스템을 작동시켜 조합원, 소농, 가족농은 물론 땅을 살리고 종다양성을 높이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의 조직 안에서 대안적인 문명 전환 실험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한살림을 다른 조직과 구별 짓는 특징인 것 같다.

전환정치

초기 한살림 사람들이 꿈꿨던 세계와 문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살림의 전환정치에 대해 이

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초기 한살림 사람들은 대안적인 정치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선언이 실린 무크지 『한살림』에는 독일녹색당의 정강 정책이 번역되어 실렸다. 김지하, 문순홍, 주요섭 등은 한살림과 별도로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약칭 생명민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관점에서 정치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기획을 갖고 문명전환이라는 비전을 정치체계의 전환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화적인 담론 구성에 머물게 되었다.

한살림 생협은 생협법 상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친환경농업, 안전한 먹을거리 등과 관련된 입법, 정책 활동 등에 힘을 기울였다.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 선거에 시민으로 참여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살림은 정치의 판을 바꾸는 전환정치가 아니라 먹거리 정치, 일상의 정치, 지역 정치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전환전략

한살림 사람들은 어떤 전환 전략을 지향하거나 수행했을까? 한살림 선언이 실린 『한살림』의 서문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개혁이다! (중략) 너나없이 안팎 없이 개혁이다. 각자 살림이 한살림되는 개혁이다.” ‘개혁’은 동학 등 신흥종교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전환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살림 선언의 주창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산업 문명을 해체하고 새로운 문명과 삶의 양식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전략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한살림 생협은 ‘틈새에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전

략'을 수행했다. 조완석 전 한살림연합 대표는 한살림의 운동방식을 이렇게 말한다. 'GMO 반대운동을 시위를 하거나, 입법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토종 종자로 된 음식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형근은 '한살림은 식품첨가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나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안을 만들고 이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말한다. 대안 만들기가 한살림의 주된 전환전략이지만 한살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나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면서 정책과정에도 참여해왔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길들이기' 전략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살림 생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자원을 소진하게 되면서, 대안 만들기과 지배구조 길들이기와 같은 전환 전략도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비밀 언덕 되기, 우리 모두 살리기

초기 한살림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각성하면 '각자 살림이 한살림 되는 개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 담론은 많은 사람에게 민주/반민주, 자본주의/사회주의와 같은 구별이 아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상상력을 주었다. 그것은 한살림, 하나의 살림을 만드는 힘이였다.

그러면 커먼즈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우리와 모두의 차이와 구별 또는 통합과 수렴이 한살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나, 우리, 그리고 모두를 하나의 살림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고 늘 뼈걱거리기 일쑤다. 한살림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배우며 공동의 것들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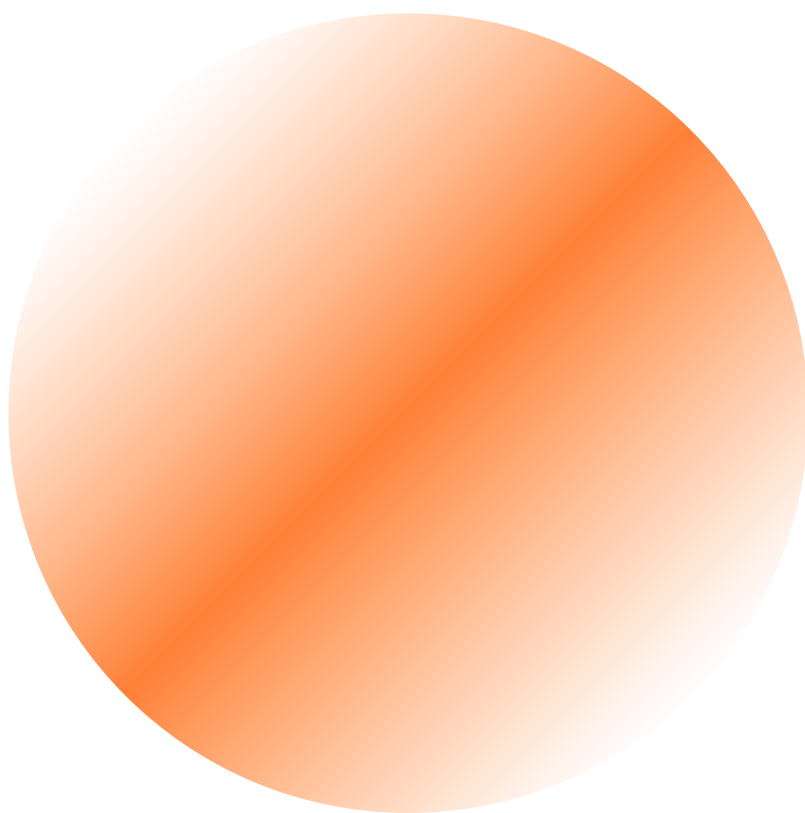
들고 진화시켜 왔다. 공동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제도를 만들고 이를 숙의하며 개인과 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한살림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커먼즈가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그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한살림이라는 조직에 접속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체계들과 접속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조직으로 한살림 커먼즈에 접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살림 사람들은 우리와 모두는 뚜렷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둘의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모두에 가깝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소통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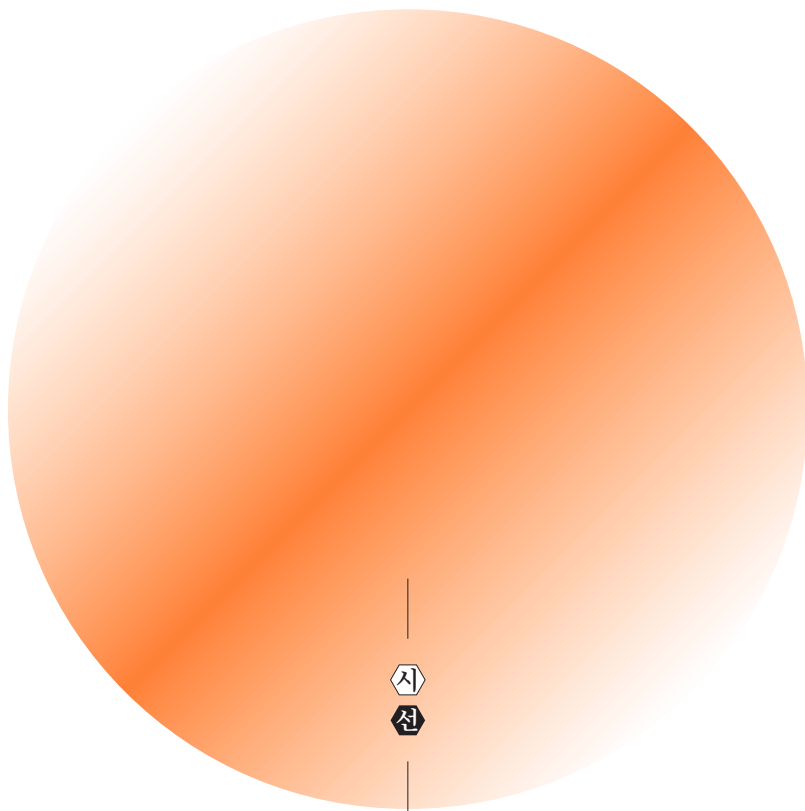
그 결과, 김자경 한살림제주 부이사장이 말하듯이 이제 한살림이 비밀 언덕이 되었다. 돈과 권력 중심으로 작동하는 세계에서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커먼즈라는 틈새의 비밀 언덕이 진화하고 있다. ‘우리끼리’ 잘 살고 행복한 커먼즈는 지탱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한살림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계, 우리의 지탱가능성을 위해 자원을 우리 밖의 ‘생명’,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모두’를 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한살림 커먼즈는 토론, 숙의, 협의를 통해 어렵게 해결해 왔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울타리를 더 높이 쳐야 한다는 압박 속에 늘 놓여있다.

초기 한살림 사람들의 큰 그림처럼 자본주의, 사회주의, 산업문명을 넘어서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저항운동, 권리의 주창운동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비밀 언덕이

이곳저곳에 생기면 모두를 살리는 문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한살림이 ‘우리 살림’을 지키기 위해 ‘모두 살리기’, ‘지배구조 해체하고 재구성하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살림은 ‘우리끼리 살림’이 되고 수많은 사업체나 결사체와 스스로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와 모두를 살리는 커먼즈 되기’라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커먼즈, 그것이 한살림의 매력이지 않을까?







시민의 주도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한계



기후생태 전환을 이끄는
여성농민의 실천

시선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한계

오수산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한다는 협동
조합이 궁금해 살짝 들어 왔다가 어느덧 10
여년이 흘렀다. 협동조합에서 보석같이 빛나
는 사람들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를
대신해 햇빛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 ksolarcoops@gmail.com

핵심어: 에너지 전환, 시민전기, 이익 공유, 지역사회 공헌

들어가며

“날씨가 이상하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심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걱정, 환경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절망감 등.

이처럼 기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늘고 있는 시대에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조합원을 모으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콘센트를 통해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9.22%이다. 대부분의 전기가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서 나오고 있다. 화석연료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며 지구를 덥히고 있다.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곧 환경에 유해한 전기 생산을 반대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든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너지협동조합은 그 전력망에 녹색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시

민들은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사업에 참여하며 에너지 전환에 실질적인 기여자가 된다.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

공통의 필요를 에너지 협동조합에 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전력 생산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촉발한 사건이었다. 값싼 전기보다 안전한 전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시민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립하자는 결의를 협동조합에 담았다. 전국에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천시민발전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겼다.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 마을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시민들이 모여 에너지 위기,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체계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모델의 작동원리는 이렇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

하는 시민을 조합원으로 모집한다.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햇빛(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인 한전에 판매하고 그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지역사회와 발전소 설치에 재투자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원칙에 맞춰 출자금을 10만 원 이하로 책정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구조를 갖추었다.

에너지 전환의 틈새를 파고들다

시민들이 전기를 만든다는 발상은 참 낯선 것이었다. 전기 공급은 한전에서 할 일이지 국민이 나서야 할 일인가?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를 다변화해야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6년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결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되도록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8년 ‘2030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그렸다. 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태양광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을 세부계획으로 정했다.

2020년,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공식 선포했다. 이 선언에서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7장 ‘정의로운 전환’ 부분에는 제52조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명시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경기콥사업을 통해 각 시군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2030년까지 100개의 지역협동조합을 설립하고 500MW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경기도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조합원이 최소 100명 이상(인구 수 50만 명 이상인 지역은 200명 이상)인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38개 회원조합, 약 13,000명의 조합원, 140여개의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지 발굴과 참여 기준은 공공부지에 위치한 지역 조합들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인근 시군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자립기반을 형성하지 못하는 조합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 호원동 테니스장 지붕의 500kW 발전시설은 반딧불이에

너지협동조합, 김포에너지시민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치한 좋은 사례이다.

에너지 시민으로 성장

에너지 전환은 사회, 경제, 정치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이다. 전력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며 기후보호를 위한 가장 큰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여러 질문과 에너지 전환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질문에 답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복잡한 관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열린 구조는 모두에게 에너지 전환의 발언권을 주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시민참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경험적으로, 발전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과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만든 협동조합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에게는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에너지 시민성’은 갈등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마을에서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빈번하다. 다수의 중재자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방식 보다는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비전을 설계하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합의시간을 갖고 추진할 경우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더 높다고 한다.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더 많은 녹색 전기 생산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쉽게 태양광을 접하고 설치하도록 돕고 학습하는 장이다.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시민발전협동조합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일념을 가진 조합원들의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졌다. 조합원들이 직접 발전소 부지를 찾아 나서고, 부지가 확보되면 전체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으고, 더 많은 시민을 조합원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운영 중인 발전소는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조합원들과 발전소 탐방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이질감을 줄여 갔다.

지금은 쉽게 재생에너지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입력한 입지 및 설비 조건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량 예측과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사업에 유용한 단계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초기에는 모두 발품을 팔아야 했다. 햇빛이 쨍쨍 비치는 건물 옥상이라고 전해 듣고 기대에 차 목적지로 향한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변건물 그림자로 태양광 패널 시공에 부적합하거나 설치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조합원들은 ‘태양광발전

소 부지 찾기 대회’ 등을 통해 수많은 부지를 찾아다니며 나름의 부지발굴 안목을 갖추갈 수 있었다. 알맞은 부지를 찾더라도 건물관리 담당자가 반대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조합원들은 계약을 추진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일반 시민들도 처음에는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와 전자파 발생이 심하다는 등의 가짜 뉴스로 인해 태양광 설치를 그리 반기진 않았지만 지금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아래에 먼저 주차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클라우드 플랫폼 발전소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9일 기준 전기사업 허가는 237,092건이고 전국에 165,940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30년이 훨씬 넘는다. 단, 처한 환경과 내용 연수에 따라 인버터 등 부속품이 고장 나거나 계량기 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상시적인 유지 점검이 필요하다. 작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가정용 태양광발전소를 점검하고 컨설팅 하는 ‘찾아가는 태양광닥터 사업’을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기능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에너지협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에너지진단 활동가들이 사업에 참여했고, 재생에너지 관련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많이 소개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국내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은 보유한 재생에너지 각 2,000MWh를 식스티헤르츠를 통해 2022년에는 카카오 제주오피스에, 그리고 20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REC 형태로 제공했다.

재생에너지가 분산자원으로 부가가치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중개거래제도, 가상발전소 운영 등 신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준비해 전력시장의 변화상황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연대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부지와 자금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부지 등에 발전소를 올리고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 현황에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은 291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은 739개로 총1,030개 협동조합이 검색된다. 조금 더 세밀하게 협동조합 명으로 검색하면 (시민)(햇빛)발전 121개, (시민)(재생)에너지 411개, 태양(광) 165개로 약 700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이중 자발적으로 지역과 연대 협력하며 시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약 120개이며 2024년 11월 기준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고 출자한 곳은 64개다. 2만 여명의 조합원과 작은 규모 10kW 상업용 발전소를 포함해 319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총 설치용량은 약 33MW이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우 공공부지 발굴 등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26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수원, 월암

IC 5.1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는 한 협동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경기 RE100 실현 의지를 알리는 공동홍보를 통해 도민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등 다양한 활동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마을과 환경단체 등 9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광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도 매월 정례회의와 학습회, 에너지책 모임 등을 진행하여 구성원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의 한계

에너지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위에서 살펴본 에너지협동조합들을 추진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크게 자발적 구성과 관 중심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에너지협동조합은 다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협동조합과 5인 또는 소수가 설립한 사업자형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한편 관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협동조합은 국가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일정 거리와 기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 수용성을 높이도록 만든 지분참여형 협동조합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익공유형 협동조합은 지역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익공유형 협동조합은 주로

융복합형 사업과 마을 단위 사업 추진 시 활용되고 각 마을 이장의 주도로 설립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은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따른 사업 안정성 확보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전체 에너지원 중 평균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주택·건물·융복합·지역 대상 보급지원사업과 RPS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건물·융복합 사업은 설치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보조금은 빠르게 소진된다.

RPS사업은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보통 에너지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REC를 공급의무자와 장기거래 계약하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력 정보가 불투명한 편이다. 2014년, 급격한 REC가격 폭락이 발전사업 수익을 악화하면서 협동조합들은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작은 규모의

발전소는 수익성이 낮아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2년에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SMP가 상승하는 바람에 특수 이득을 보았다. 이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국전력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SMP상한제를 실시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소규모 발전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 가격이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 가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때까지는 예측 가능한 기준가격매입제도(FIT)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분산에너지로 전환과제

금융권에서는 태양광의 ‘태’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부실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이후 나타난 변화이다. 소형 태양광 발전소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제도(한국형 FIT)가 폐지되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의 계통접속 보장제도도 폐지되고, 한전 분산형 전원 배전연계 기준은 축소되고, 계통포화지역 발전사업허가는 중단되는 등 에너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500MW 이상 대형 발전사업자가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의 의무공급량 역시 축소되었고 경매제도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

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중심의 분산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에너지원을 소유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위로서 에너지의 분산과 전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도 발전소 설치과정의 입지 갈등과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 보상금 지급방식은 발전소 설치비용을 상승시킨다. 발 빠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학습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와 에너지전환의 당사자로 분산에너지 기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무리

에너지협동조합은 건물, 옥상과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전기를 만든다. 태양광발전 전기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미세먼지도 배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다.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1년간 운영하면 35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57,500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30년생 소나무 57,500그루가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27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000kW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원 구성에서 태양광발전의 역할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숨겨졌던 ‘태’자를 다시 꺼내는 것이다. ‘태양광’ 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될

까요?’라는 요청마저 있다. 태양광을 ‘햇빛 농사’로 불러야 할까? ‘이익 공유’라고 불러야 할까? 무엇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도 아니고 태양광을 태양광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9월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본청 앞 잔디밭으로 옮겨졌다. 국회를 오가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옮겨졌다고 한다. 제막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모두 기후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22대 국회가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이 탈석탄·재생에너지확대 입법촉구 서명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후위기 시계를 멈추는 일이 시급하다. 더 늦기 전에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고 시민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녹색 전기를 만들어 갈 때이다.

시선

기후생태 전환을 이끄는 여성농민의 실천

정숙정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경북대학교에서 사회학, 여성학 과목을 강의하고,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에서 '전환의 시대, 지역, 여성 그리고 삶의 생산'을 주제로 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생태 텃밭 가꾸기, 글쓰기 모임을 함께 하며, 서로 돌보는 삶을 꿈꾸고 있다.

✉ sebah75@daum.net

핵심어: 여성농민, 기후생태위기, 생물다양성, 토종씨앗, 전환

농촌의 장면들

2015년, 겨울 농사라 불리는 꽃감 농사가 한창이었지만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춥고 건조했던 예년 날씨와는 달리 습하고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 그 바람에 껍질을 깎아서 달아놓은 감에 곰팡이가 피고 일부는 녹아서 바닥에 떨어졌다. 꽃감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했던 젊은 농부들의 자살 소식도 들렸다.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소규모 꽃감 농가들은 생산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대형 감타래와 건조기, 환풍기, 급속 냉동기 등을 갖춘 대규모 농가들이 꽃감 생산을 주도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하늘과 동업이 끝났다’라는 말을 한다. 이전에도 날씨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절기 리듬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으며 농사를 지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유례 없는 폭염, 긴 장마, 이상고온과 폭우, 가을 더위 등 기후조건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리듬도 달라지고 있다. 땅과 생물을 접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은 가장 먼저 위기의 징후를 읽어내고 있다. 농민들은 너무 이른 봄에 찾아온 여름 철새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너무 일찍 피었다가 냉해를 입는 과실나무를 돌봤다. 무엇보다 낮은 병해충이 창궐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미국선녀벌레, 총채벌레, 토마토뿔나방, 과수화상병 등 생소한 병해충의 위협을 받고, 효과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방제약의 피해도 겪고 있다.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할 수 없었던 병해충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는 식물들의 면역력도 떨어져 한번 병에 걸리면 대규모 피해로 번지기 일쑤다. 올해 큰 피해를 입힌 벼멸구도 이상기후 때문이었다. 7월부터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벼멸구의 산란 횟수가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증식했다. 농민들은 생태계 교란과 기후변화가 결합하면서 전례 없는 악조건이 형성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질문하곤 한다.

여성농민의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분이 적은 농촌 빈곤층,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FAO는 24개국 109,000가구와 70년간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촌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¹⁾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가난한 농촌 여성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부유한 가구에 비해 가난한 가구는 더위로 인해서 5% 더 많은 소득을 잃고, 홍수로 인해서는 4% 이상 더 많은 소득을 잃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 남성이 가장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여성가장인 가구는 과도한 더위로 인해 약 8% 더 많은 소득을 잃고, 홍수로 인해 3% 더 많

1) FAO. 2024. The Unjust Climate: Measur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rural poor, women and youth.

은 소득을 잃는다.

여성농민의 취약성은 농민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 친환경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고지영·강권오(2023)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80.8%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새로운 종류의 병해충 증가(77.2%)와 작물 재배 적정 시기와 적지 변화(62.4%)를 심각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기후변화 체감도는 여성(4.31점)이 남성(4.07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고,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인식 역시 여성(4.22점)이 남성(3.93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높았으며, 특히 여성(46.9%)이 남성(33.2%)보다 높게 나타났다.²

기후위기는 농작물뿐 아니라 농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3년도에 온열질환자의 17.8%,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했다.³ 평년보다 1.9℃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2024년에는 온열질환자가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0% 가량 늘었다. 온열질환자 중에서 농업 분야 질환자는 약 18%에 해당하며 남성(67.5%)이 여성(32.5%)보다 많았다. 농업분야 온열질환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의 32.4%에 해당하며, 여성(7명)이 남성(4명)보다 많았다.⁴

2) 고지영·강권오, 2023. 「제주지역 친환경농업 생산자 실태와 확산 지원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하지혜, 2024. “폭염피해 속출...농가 안전망 재점검을”. 『농민신문』 2024.8.12.

4) 김수나, 2024. “역대급 폭염이 남긴 2024년 농업분야 온열질환”. 『한국농정』 2024. 10.10.

감염병 위험도 높아졌다. 농작업 관련 여성의 질병 위험은 남성
에 비해 1.21배(95% CI: 1.00~1.4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
업환경 중 먼지가 순환기계 질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에 포함된다.⁵ 여
성들은 기계화율이 높은 논농사보다는 손노동이 많은 밭농사를 주로
하며 잡초 제거, 작물 수확을 맡아서 하는 편이다. 이러한 농작업 특
성 때문에 여성 농민은 근골격계 질환과 더불어 찻가무시증 등 곤
충 매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털진드기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찻가무시증 환자가 다수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 중 여
성이 61.9%로 많다.⁶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 쉬기도 하던 것은 옛일이
되었고, 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겉옷, 긴 장화, 장갑, 마스크, 모자 등
보호 피복을 착용하고 해충 기피제까지 준비해야 한다.

기후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건강 위해가 늘어나는 반면, 이
에 대한 보장제도는 지체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 재해 등 열악한 농업 환경에서 증가하는 농민의 건강
위험에 대비한 사실상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 보험은 정부와 지
자체가 절반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
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도록 설계되
었으나 가입률은 높지 않다. 23년 가입자는 66.4%로 33.6%가 미가
입 상태이며, 2020년 가입자 기준, 62.9%가 남성이고 여성은 37.1%
에 불과하다. 특히 영세농과 차상위계층 농업인의 가입률이 매우 낮

5) 박진우·김진흙·윤간우·이민지. 2023. “한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 추정 및 특
성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24(2): 27-41.

6) 질병관리청. 2022. “2022년 찻가무시증 주간소식지.” 2022.11.19.

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많다. 보장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이 민영보험 형태로 NH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생명보험사 중 NH농협생명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다.⁷⁾ 농업인안전보험 확충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지만 사회보장적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여전한 것이다.

사라지는 녹두, 팔 그리고 여성농민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 영향은 ‘사과 배 주산지 200km 북상’, ‘연평균 기온이 1℃ 오를 때 농작물 재배 가능 지역은 81km 북상’과 같은 단선적인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온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가 어렵다면 열대과일을 심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농사와 농사지식의 특수성 때문이다. 지역마다 다른 지형과 생태계, 서로 다른 작물, 다양한 농법과 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수한 농업 조건을 형성한다. 농민은 복합적 조건과 축적된 농사 경험을 고려해 지역과 작목에 맞는 고유한 농사지식을 구성해 왔다. 이에 대해 비아 캠페시나 김정열 조정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농사는 단기간의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작목 전환은 새로운 농기계와 자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의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하므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⁸⁾

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http://cucs.or.kr/?p=14289>(검색일 2024.10.15.)

8) 2014년 11월 14일 ‘기후위기와 여성농민’이라는 주제로 비아캠페시나 김정열 조정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열악한 농업 현실,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농업 환경 악화를 반영하듯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농림어업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농가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여성은 연평균 3.1%씩 감소했다. 또한 60세 이상 여성 비율은 68.6%로 남성 66.1%에 비해 높고, 고령일수록 여성이 많다. 반대로 50세 미만 모든 연령에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에 비해 적다.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여성농민의 규모는 더욱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민의 감소와 더불어 여성농민의 손을 거쳐 나오던 노지 작물들도 점차 감소하여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점점 귀해지는 곡물 중 대표적인 것이 팔과 녹두이다. 팔은 영국이 휘감기며 자라는 특성이 있고, 녹두는 꼬투리가 쉽게 열려서 매일 따야 하기에 기계화가 더디다. 대부분의 팔과 녹두는 여성농민들의 손노동을 거쳐 수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녹두는 10년 사이 약 25%가 감소했고, 팔은 2015년 71,829가구(3,705ha)가 재배하였는데 2020년에는 43,820가구(1,292ha)로 대폭 줄었다.

여성농민이 사라지면 다양한 작물도 사라진다. 개굴팔, 이팔, 재팔, 흰팔, 노란팔, 끝팔, 검은 팔, 쉬나리팔, 봄팔, 송아지팔, 늦팔, 올팔, 비단팔, 털팔, 기니팔 등 팔 이름만 해도 쉰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팔을 심고 키우고 거들 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계량된 소수 품종만 남게 되고, 다양한 토종 작물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생물다양성은 인류 삶의 기반이다. 한상기 박사의 사례는 생물다양

성 보전이 인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한상기 박사는 197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카사바의 품종을 개량하여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1983년 나이지리아 요루바족 이 키레 마을에서 ‘농민의 왕’을 의미하는 ‘세리키 아그베(Seriki Agbe)’라는 칭호로 추장에 추대되었다. 당시 나이지리아 일대는 주식인 카사바의 병충해로 대기근을 겪고 있었는데, 한 박사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토종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활용하여 병충해에 강한 카사바 품종을 개발할 수 있었다.⁹

여성농민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주역이다. 여성농민은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해 지역의 풍토와 계절에 맞는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것이 김장이다. 김장은 신선한 제철 지역 농산물을 거둬 공동체가 겨우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저장하는 일이다.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풍성하게 나는 농산물을 저장식품으로 가공하는 생태적 지혜가 담긴 음식문화다. 여성농민은 가족과 공동체가 먹을 음식을 위해 씨앗을 갈무리하고 보관했다가 봄이 오면 다시 심고, 호미로 김을 매고 가꾸어 수확한 것을 다듬고, 함께 어울려 김장을 한다. 여성농민들의 토착적 문화와 리더십이 있었기에 우리 음식문화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었다. 여성농민이 없다면 다양한 토종씨앗과 고유의 맛을 잃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문화, 정체성도 잃게 될 것이다.

9) 석진희. 2022. ‘아프리카의 한국인 추장 “식량위기, 다양성이 인류 구할 것”’, 『한겨레』 2020.9.5.

산업적 농업체계와 지속가능성 문제

인류는 다양한 생물종에 의존해 식량, 의약품, 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을 얻는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생물다양성은 병해충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손실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가 진전된 지난 50년간 야생 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73% 감소했고 특히 담수개체군이 8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구생명 유지 체계가 손상되고, 세계적 사회 불안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식량 체계와 산업적 농업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이다. 산업적 농업은 담수 취수량의 70%를 사용하고, 산업적 농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의 86%에 대한 주요 위협이 발생하며, 열대 산림 파괴의 90%를 초래한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의 40%가 인간을 위한 식량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농경지의 82%가 가축 사육과 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생산·가공·유통과 폐기에 거친 먹거리 분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식량 체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적 식량체계는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면서도 정작 인간에게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화학물질과 GMO로 식량 생산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북반구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업적 농업은 여성 농민과 소농과 같은 취약

계층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여성 농민들은 성 불평등 구조와 자원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으며,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적 식량체계에서 기후생태 위기와 식량위기는 함께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전 세계 사탕수수의 40%가 생산되고, 옥수수·대두의 30~35%가 미국에서 생산되며, 쌀·감자의 25%는 중국에서 생산된다. 온오프라인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식량의 대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먹거리 체계에서 한 국가의 기후 생태 위기는 전 세계 인류의 먹거리 위협과 연결될 수 있으며, 우리는 최근 부쩍 인상되는 식품 가격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즉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식량 체계는 기후생태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전환을 실천하는 여성농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농민 권리 침해와 식량 문제가 얹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대안은 무엇일까? 2020년 유엔인권위원회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생태농업, 전통적인 재배 방식과 토착지식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업지식과 생태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적 농업은 전통적 토착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의 생태계를 활용하는 복합적이고 순환적인 영농방식이다. 생태적인 농업이 관행

농에 비해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는 많다. 남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 공동체 관리 자연농업(APCNF)은 농어촌 생계,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접근,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물 부족, 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부들의 농업생태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지원한다. 약 63만 명의 농부가 참여해 자연농법을 실행한 결과 작물 다양성이 2배,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 평균 11%, 농부들의 순이익이 49% 늘어났고, 가구 식단 다양성도 증가했다.

여성농민 조직은 여성농민의 기후 취약성을 줄이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니카라과 공화국의 여성 농민 조직인 ‘함께하는 여성재단 (Fundación Entre Mujeres: FEM)’은 20년 넘게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생명 돌봄 윤리를 기반으로, 페미니즘에 입각한 생태적 농업 모델을 만들어 왔다. FEM은 시장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경제 개념을 문제화하고, 생태학, 상호의존성, 돌봄 경제를 통합하여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농생태학에 페미니스트 보살핌 윤리를 결합함으로써, 지배적인 자본주의적·가부장적 합리성과 세계관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의 공간을 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아 캠페시나 소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소농 중심의 농생태학과 시장의 재지역화를 통한 대안적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전여농은 기후·생태 위기를 완화하는 생태농업을 추구하며 미생물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땅에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언니네 텃밭, 여성농민장터, 로컬푸드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연

결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만들고 있다.

언니네 텃밭 공동체는,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챙기기 위해 텃밭 농사를 지어왔던 여성농민의 삶을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해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다. 농사와 가사에서 많은 노동을 담당하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과 수입이 없었던 마을 여성들이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기 이름의 농사를 짓고 통장을 만들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이들 공동체는 나이 든 여성농민이 지닌 토착 지식을 인정하고 전통적 식문화를 존중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서로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농민들은 성차별적 농가 문화 속에서 자신의 농토를 확보하고 농사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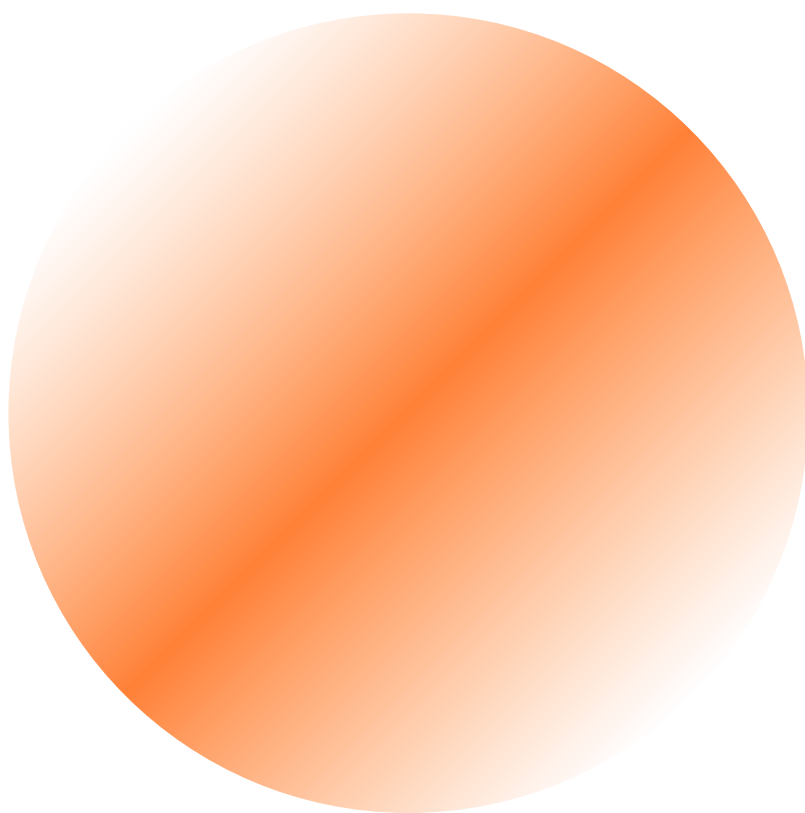
전여농은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촌여성들의 손에서 손으로 간신히 이어져 내려오는 토종씨앗을 발굴하고 씨앗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전통적 지식을 활용한 농생태학 실천과 토종종자 농업은 기후생태위기 속에서 적응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태적 농업에 대한 정책적 인정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가는 여성농민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여성농민들의 종자주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생태적 실천을 인정하며 생태농업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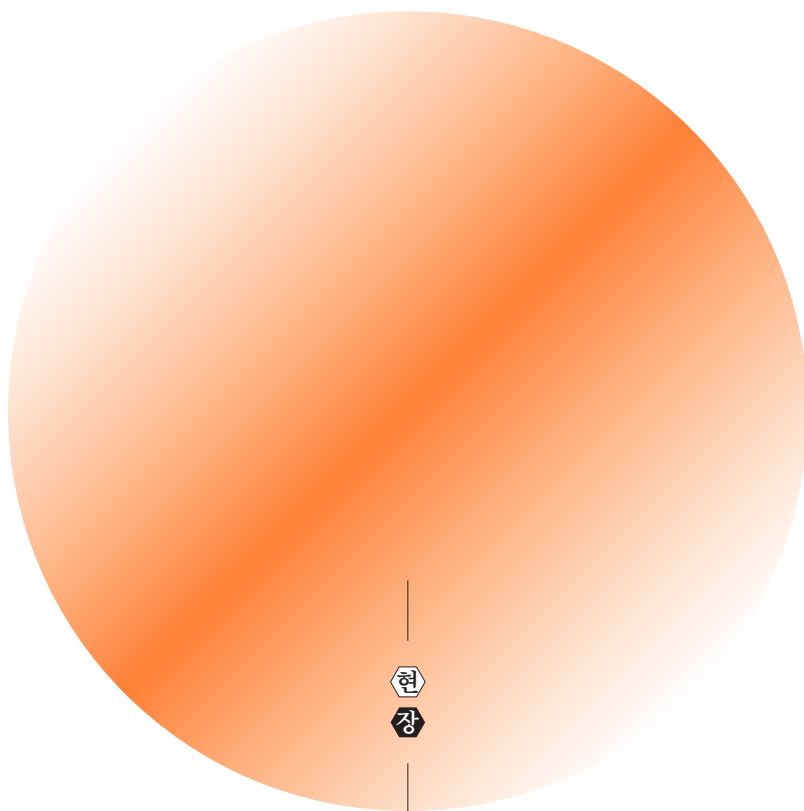
여성농민을 전환의 중심에 두기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여성농민의 역할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여성농민들은 전통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지역의 식문화와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기후생태적 전환의 실천적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여전히 공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 부족, 성차별적 문화 및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회복,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형성의 핵심 주체이다. 여성농민의 생태적 실천은 산업적 농업체계의 대안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순환적 생산·소비 구조를 강화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여성농민이 자신의 농업방식과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하고, 성평등한 농정 정책을 제공하며, 그리고 토종종자와 생태농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민을 전환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단지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기후생태위기 시대를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어가는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여성농민이 지닌 전통지식, 공동체적 문화, 돌봄과 연대의 가치가 결합함으로써 대안적 농업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이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누구나 좋은 것을
먹고 나눌 권리

모심지가 만난 현장

누구나 좋은 것을 먹고 나눌 권리

백가영, 배기현, 박한솔 (벗밭)

<벗밭>이라는 회사에서 지속가능한 식사를
알리고, 그 첫 번째 경험을 함께하는 일을 하
고 있다. 제철의 채소와 과일로 계절을 촘촘
하게 누리는 것이 요즘의 즐거움이다. 더 많
은 친구들과 먹는 나, 기르는 사람, 자라는
환경이 더불어 건강한 식탁에서 자주 만나
고 싶다.

✉ butground@gmail.com

핵심어: 식문화, 청년, 식사 커뮤니티, 생산과 소비의 연결

벗발은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알리고, 그 첫 번째 경험을 함께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의식 있는 먹거리 소비를 지향하며 식탁과 연결되는 요소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활동의 한 축은 우리가 먹는 일이 환경, 사회, 그리고 우리 몸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소개하는 교육이다. 삶과 삶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쉽게 경험하는 커뮤니티도 운영한다. 그 밖에도 <건강하게 먹는 일>을 포괄하는 여러 행사와 콘텐츠를 기획하는 중이다.

2019년, 활동을 시작하며 우리의 일에 담고 싶은 의미를 이리저리 붙여보다 ‘벗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벗’에는 친구들과 같이 좋은 식사를 먹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고, 우리 먹거리가 자라는 곳을 상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을 연달아 붙였다. 벗발을 영문으로 옮기면 <Butground>가 되는데, 잘 먹고 사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자는 다짐도 녹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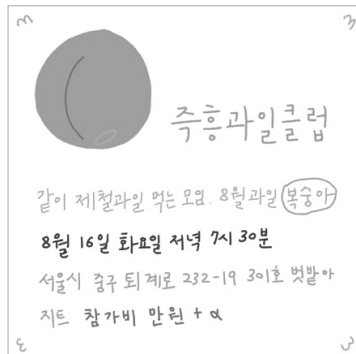
이름대로 산다는 말처럼, 벗발 역시 이름 따라 많은 친구를 만나고 있다. 발, 식탁, 교실 등 마주치는 장소도 다양하다. 우리의 벗들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2024년에 진행한 벗발의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즉흥과일 & 채소클럽” - 함께 즐기는 계절의 맛

벗발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모여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잠깐 숨 돌리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한 멤버가 이야기를 꺼냈다. 과일이 먹고 싶은데 혼자 사니 그게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공감으로 시작해 복숭아 철이 지나기 전에 함께 과일 먹는 모임을 만들어보자는 성근 기획까지 한달음에 이어졌다. 누구나 무리 없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과일모임에 ‘즉흥과일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SNS에 올릴 홍보물도 태블릿으로 쓱 쓱 그려 만들었다.

첫 번째 즉흥과일클럽을 여는 날, 작은 사무실에 열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특히나 무른 과일인 복숭아이기에 혼자라면 사는 것도 엄두내지 못할 식탁이었을 터다. 하지만 여럿이 모이니 백도, 황도, 천도부터 말랑한 복숭아와 딱딱한 복숭아까지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저마다의 동기와 사는 환경은 다양했지만, 과일까지 더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즉흥과일클럽의 순서는 자기소개로 시작한다. 이어서 그날의 주제 작물을 소개하고, 다양한 드레싱을 곁들여 작물을 새롭게 맛본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전하는 질문과 소감을 나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모임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유기적인 식탁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로 대화하며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을 뿐인데도, 우리는 식탁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식탁 너머에 있는 생산자, 더 나아가 자연과 이어진다.



죽흥적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햇수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한편, 과일 먹고 싶어서 왔다는 목소리에서 혼자 사는 이들의 식탁을 살핀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500g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1인 가구가 29.3%, 4인 이상 가구가 39.5%로 10% 이상 차이가 났다. '1인 가구라 과일 먹는 횟수도 적고 혼자 먹는데 가족과 함께 먹는 기분이었다'는 한 참가자의 후기가 떠오른다. '식구'의 정의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이다. 엄밀히 말해 식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절에 느슨히 만나는 '제철 식구'가 된다. 이 모임에 오게 될 이름 모를 식구들을 생각하면 벚밭의 손은 자꾸만 커진다.

이번 가을에는 60여 명의 벚들과 세 품종의 배, 세 품종의 감을 같이 먹었다. 다양한 품종 역시도 죽흥클럽을 통해 전하는 가치 중 하나다. 과학자들이 명명한 현생 식물은 30만 종 이상이지만, 사람들



이 섭취하는 열량의 90%를 차지하는 작물은 열다섯 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단순한 식단에 기대며 지구의 형태도 단순해지고 있다.¹⁾ 열다섯 종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작물’을 조명하고, 한 작물 안에도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걸 알아간다. 토박이씨앗²⁾에서 자라난 채소를 먹고, 서너 가지 품종의 과일을 즐기는 오늘의 식탁이,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자연의 경관을 가꾸는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한다. 다 채롭고 즐거워지는 우리의 식탁은 덤이다.

“퇴근 후 마르쉐” - 농장으로부터, 식탁으로부터

오랜 취미 중 하나는 시장에 가는 것이다. 여러 시장 중에서도 농부 시장을 가장 좋아한다. 생산자와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내가 먹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처를 알아가는 경험이 즐거워서다. 농부

1) 룽 던 (2018), 『바나나제국의 몰락』

2) 토종씨앗은 우리 땅에 토착화된 씨앗으로, 형질이 고착화되어 매년 안정적인 수확량이 검증된 씨앗을 말한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몸과 마음이 든든하다. 양손 가득 한 식재료에 농부님의 이야기가 덩으로 담긴 덕이다. 좋아하는 걸 나누면 곱절로 즐겁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나에게 즐거운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농부시장 마르쉐에 문을 두드렸다.

‘퇴근 후 마르쉐’는 벼밭과 농부시장 마르쉐가 힘을 모아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평일 주중에 진행되는 마르쉐 시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벼들이 참여 인원의 대부분이다. 2달 동안 15명의 식구와 네 번 만나, 네 번의 계절 꾸러미를 나누고, 세 번의 식사모임과 한 번의 농가행을 함께한다.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가 되며, 생산과 가까운 식사를 일상에서 이어가 본다.

계절 꾸러미는 세 개 테마로 꾸린다. 늘 부엌에 두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생활’ 식재료, 지금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계절’ 식재료, 시도해 보지 못했지만 한 번쯤 도전해 볼만한 ‘어디 한 번’ 식재료가 그것이다. 마르쉐 채소시장이 있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시장이 없는 모임 날에는 아침 일찍 서둘러 농장으로 향한다. 차로 두세 시간이 걸리는 농장까지 가서 채소를 받아오는 것이 세상의 효율과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채소에 밭의 이야기를 담아 전하기에는 직접 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올해 봄을 시작으로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총 세 편의 프로그램을 이어오며 나의 계절은 촘촘하게 즐거워졌다. 1년이 24개의 절기로 나뉘듯, 하나의 계절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면과 맛이 있는지 알아갈수록 벚들과 모임에서 나눌 이야기도 절로 늘었다.

제철 작물은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운 선물인 동시에 문턱 낮은 지속가능한 식사를 시작할 계기이기도 하다. 화석연료로 추위와 더위를 극복하며 제철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요즘, 자연의 시계에 발맞추어 자라는 작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많은 설명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입에 넣는 순간 ‘맛’으로 제철 작물의 의미를 실감한다. 쫄쫄한 햇살을 맞고 자란 토마토의 감칠맛이, 추위를 견딘 뒤 한껏 달콤해진 무의 맛이 제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자연에 기대어 자란 작물이 주는 힘이다.

한편, 퇴근 후 마르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식재료, 식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뭉쳐서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는’³⁾ 장이기도

3) 퇴근 후 마르쉐 : 가을편 (2024) 식구의 후기 중 일부



하다. 오프라인 식사 모임에선 손을 모아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 온라인 채팅방에선 집으로 가져간 꾸러미를 어떻게 요리해 먹었는지 공유한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식사를 상상하고 실천할 용기를 얻는다.

“받아 가는 채소가 생소했는데, 순무를 가져간 덕분에 감자전분을 사보게 됐고, 땅콩호박을 가져간 덕분에 찹쌀을 사보게 됐어요. 그 농산물 외에 다른 식재료에도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어요. 늘 어려운 식재료는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요.”⁴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건너뛰기보다는, 궁금해 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요리해 보려고 한다”⁵는 또 다른 식구의 말을 통해 몰랐던 채소를 함께 경험하는 일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벗발>의 역할을 찾는 순간이기도 하다.

4) 퇴근 후 마르쉐 : 가을편 (2024) 식구의 후기 중 일부

5) 퇴근 후 마르쉐 : 가을편 (2024) 식구의 후기 중 일부

채소와 과일 그 자체를 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 애써서 길러 보내주신 계절의 작물이 남김없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요리와 식사를 통해 식재료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집단지성을 모아 더 맛있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법을 공유한다. 또 농장으로부터 출발한 이 모든 경험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힘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식탁에서 나눈 식사와 이야기를 농부님께 전한다. 건강하게 기르고 먹는 일이 지치지 않고 이어져 계속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다.

“환대의 식탁 : 제주” - 환대받고, 환대하기

벗밭은 지속가능한 식사의 문턱을 낮추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외에도, 식사와 연결된 수많은 관계를 알아가는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에서 가공을 거쳐 유통과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식량 시스템 안에서 사람과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앞으로 우리의 식탁은 어떠해야 하는지 상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여름과 겨울,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는 드넓은 배움터는 바로 제주다. 방학 기간에 맞추어 일주일간의 여정을 15명의 대학생과 제주에서 함께한다. ‘자연의 환대’, ‘벗과 밭’, ‘환대의 식탁’이라는 세 주제 안에서 자연을 느끼고, 생산자와 연결되고, 지속가능한 식사를 경험하며 관계 맺는 시간을 보낸다.

감자 2,000평 수확을 마친 뒤, 빠근한 허벅지를 붙잡으며 농부님이 건네주시는 질문을 마음에 담았다. ‘이렇게 고된 친환경 농사, 계



속해야 하나? 농산물의 가격은 적절한가?’ 이 모든 물음은 책 속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밭에서 몸을 움직이는 순간에 있다. 일시적인 참여를 넘어, 머리와 몸에 오래도록 남는 경험을 ‘밭’에서 하는 이 시간은 도시로 돌아간 뒤에도 ‘다르게 먹어볼 용기’를 일으켜준다. 한 끼 식사에 나의 몸, 기르는 사람, 자라는 환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아주 조금이라도 더불어 건강할 수 있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급식, 외식, 배달 음식. 완성된 음식을 만나는 이들에게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상상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밭에서 몸을 움직인 뒤에야 우리는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여겨지는 채소와 과일이 사실 자연에 기대어 자라는 자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지런하기보다는 모두 제각기 자라는 모양과 크기가 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체감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매해 더워지고 길어지는 여름을 느끼며, 우리가 만났던 농부 친구와 다량쉬오름이 보이는 구좌의 밭을 걱정

한다. 에어컨 아래에서 보내는 여름, 히터 아래에서 보내는 겨울에서 때로 계절을 잊을 때도 기후 위기를 최전방에서 경험하는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고 다르게 살아볼 시도도 한다.

‘환대의 식탁’ 프로그램 이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한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자연의 환대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동안 무관심했던 자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들인다는 것.”⁶

결심하고 도전하는 시간 이전에, 어떠한 존재로부터 오롯이 환대받기를 바랐다. 더디게 걸어가는 벼밭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는 친구들을 소개한 이유도 그것이었다. 농사짓는 친구, 요리하는 친구, 토종씨앗을 이어가는 친구, 자연이라는 친구까지. 우리에게 지구 환경을, 생산하는 사람을, 먹는 나를 함께 돌보고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다는 걸, 환대받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벼밭의 주제의식, 유기적인 삶

모든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목적은 바로 ‘연결’이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농부님의 이야기가 생생하다. 벼밭을 시작하고 한 해가 지난 뒤 거창의 사과밭에서 만난 생산자님의 질문을 기억한다. ‘유기농’의 ‘유기’가 무슨 뜻인지 아냐는 물음. 농약과 화학비

6) <2024 환대의 식탁: 여름> 참가자 후기 중 일부



료 사용하지 않고 기르는 게 유기농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밭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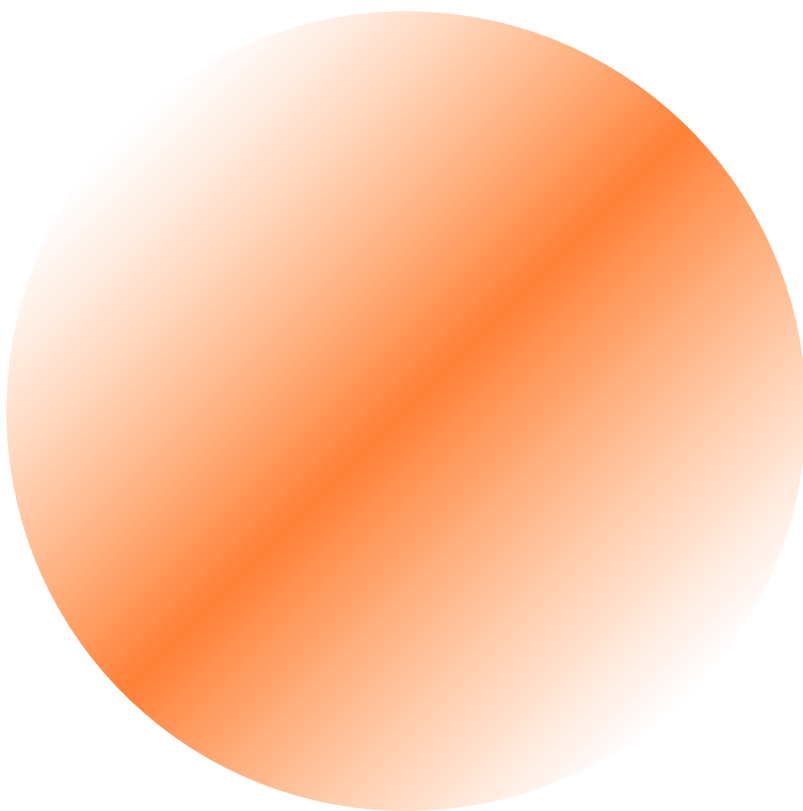
유기는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한 통일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 유기와 농사를 나란히 연결해 본다. 우리가 먹는 일과 연결된 수많은 존재와 더불어 건강하기를 애써 택하는 것이 바로 유기농, 그리고 유기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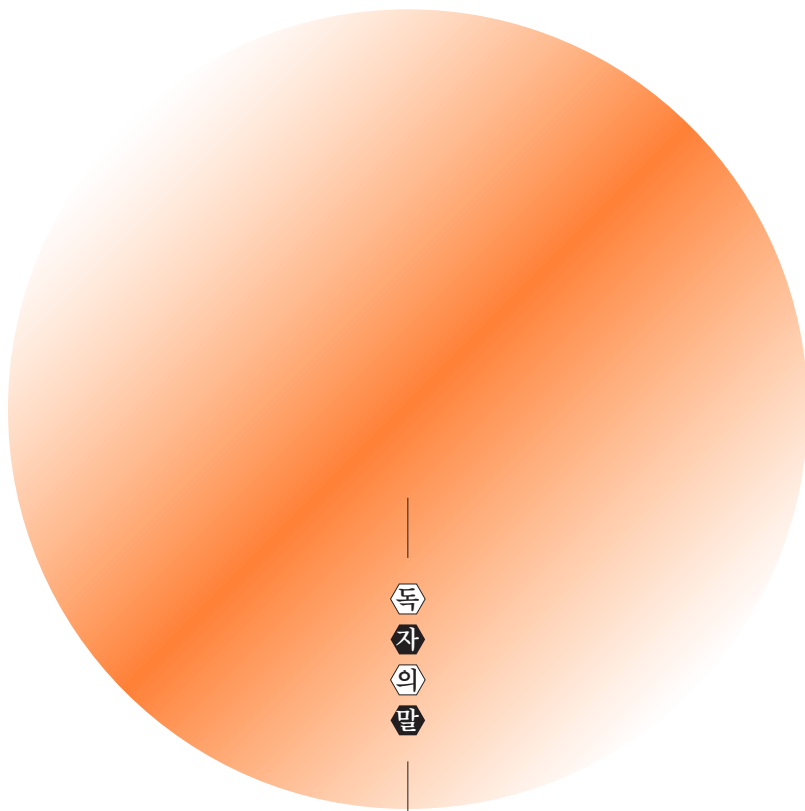
그 뒤로 4년이 꼬박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유기적인 삶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청한다. 벼밭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2020년 거창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된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새로운 한 문장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괜한 아쉬움이 들던 어느 날 외딴 글을 읽다 ‘주제의식’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됐다. 한 편의 글을 한 편의 삶으로 길게 늘어본다면 <벼밭>을 이어가는 우리의 주제의식에는 ‘유기’라는 가치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삶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은 존재를 돌볼 수 있는 식사’라면 좋겠다. 당장의 우리는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라면 쉬워지는 식탁 위에서 더 많은 친구와 배부른 식사를 주고받고 싶다.

또 회사도 지속가능하게 꾸려가고 싶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벗발 하는’ 나와 우리 동료의 삶도 잘 돌보고 싶다. 그래서 ‘밥부터 먹자’는 사훈도 정해두고 열심히 지켜가는 중이다. 더불어 잘 먹고 살자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열심히 기대려 한다. 땅에 기대고 친구들에게 기댄다. 벗발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기댈만한 넉넉한 품이 있는 장소가 되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독
자
의
말

불편한 마음을
성찰하기

독자의 말

불편한 마음을 성찰하기

모심과살림지 22호,
“남의 살을 먹는 마음”을 읽고

김정연, 김희남, 박현진, 이세은, 이은정 한살림제주 독자모임

편집부의 말

한살림제주 독자모임에서는 꾸준히 「모심과살림」 과월호를 읽으신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함께 행동하며 실천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모심과살림지 편집부에 들려왔습니다. 글이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요? 글이 생명을 얻어 누군가의 삶에 뿌리박는 것은 책을 만드는 이들이 느끼는 최고의 기쁨이자 찬사일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핵심어: 불편감, 육식, 채식, 밥상, 성찰



“남의 살을 먹는 마음”, 이번 호의 핵심어는 단연 ‘불편’이 아닐까 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어찌면 외면하고 싶은 단어와 표현들,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편견,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못했던 나태함 등... 육식과 채식에 대한 우리 안의 다양한 불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채식에 대한 여러 고민들과 거대한 축산업에 가려진 노동과 기후위기 문제까지, 이번호를 통해 ‘먹는다는 것’의 부끄러움, 수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글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챌린지를 해보았습니다. 1주일에 1번
채식! 처음엔 ‘1주일에 한번쯤이야’ 하고 만만하게 생각했지
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단체 톡방에 인증사진 올라
오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지요...ㅋㅋㅋ)



채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새로운 밥상을 차리기 위해 더 부지런해져야 했고, 고기가 주된 자리를 차지했던 식탁, 그리고 오랫동안 익숙했던 식습관과 고기 반찬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채식밥상을 차리면서 매기 우리의 밥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일, 그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작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고민하고 실천해 온 분들도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까요. 앞서 간 섬세한 감수성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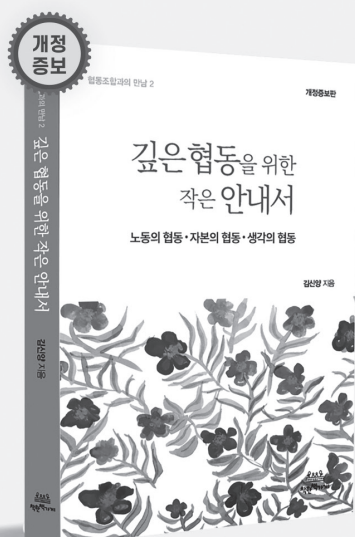


이번을 시작으로 우리의 밥상이 좀 더 자연스러워 질 때까지, 좀 더 가벼워질 때까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일상으로 들여놓아 보려고 합니다. 챌린지뿐 아니라 모임을 할 때에도 채식식당을 찾아가고 같이 채식요리를 해보는 등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불편함과 마주하고, 내 손으로 새로운 밥상을 차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과정까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협동할 것인가?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어떻게 조합원이 주인노릇을 하게 할 것인가?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

노동의 협동 · 자본의 협동 · 생각의 협동



협동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협동조합 입문서

김신양 지음 | 13,000원

협동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각자의 답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협동을 중심에 두고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 세 가지 화두를 던졌다.
무엇을 협동할 것인가?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어떻게 조합원이 주인노릇을 하게 할 것인가?
조합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이미 주인노릇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같은 질문에서 협동이 시작되고 협동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 된다.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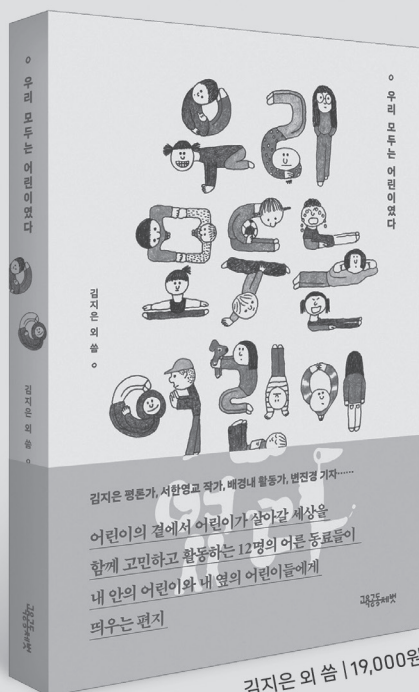


홈페이지 | www.sogoodbook.com | 이메일 | bonaliber@gmail.com | (02) 322-3238

김지은 평론가, 서한영교 작가, 배경내 활동가, 변진경 기자...

어린이의 곁에서 어린이가 살아갈 세상을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12명의 어른 동료들이
내 안의 어린이와 내 옆의 어린이들에게
띄우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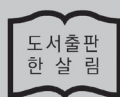
● 우리 모두가 어린이였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찬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손쉽게 혐오당하는 어린 사람들.....
가장 약한 존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모두를 위한 사회이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고 여전히 어린이를 품고 살아가기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밥상을 모색하는 한살림 요리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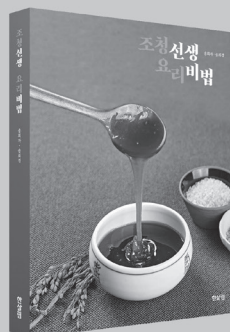
밥을 짓다
사람을 만나다
고은정 지음
값 19,000원



자연이 차려준
절기밥상
한살림식생활센터 지음
값 18,000원



전식 쌀가루로
떡 만들기
이준원 지음
값 17,000원



조청선생
요리비법
송희자·송희경 지음
값 23,000원



우리 땅 친환경
제철 먹을거리로 만드는
한살림 요리
채송미 지음
값 18,000원



한살림이 제안하는
살림밥상 차림
한살림식생활센터 지음
값 17,000원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blog.naver.com/salim_story 이메일 story@hansalim.or.kr 전화 02-6931-3612